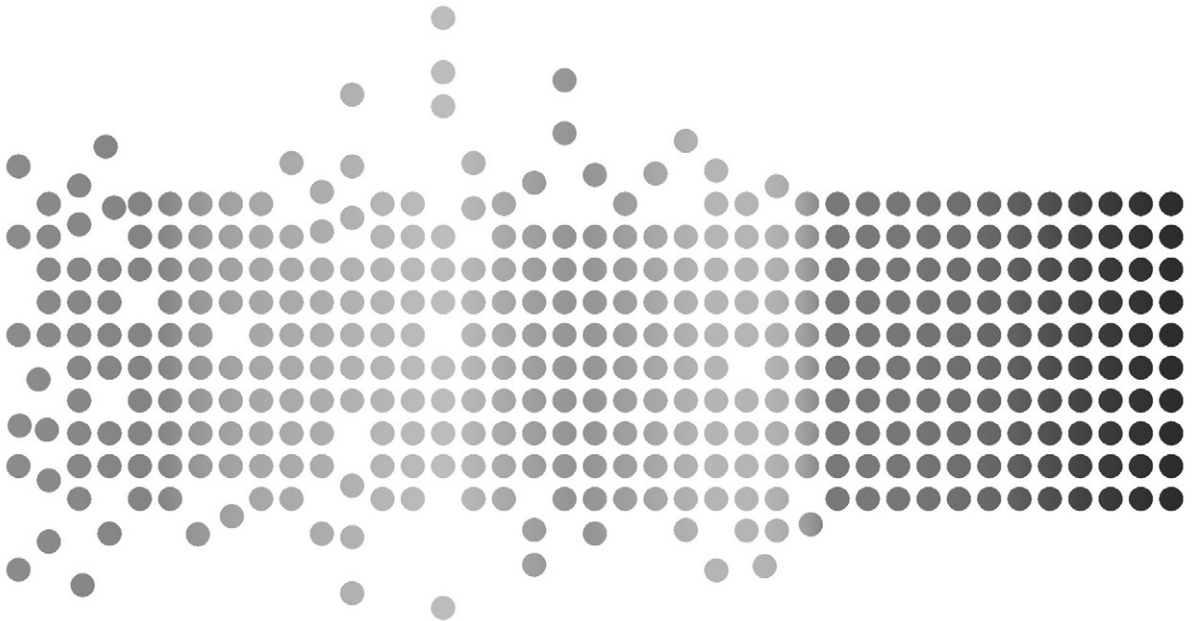




출산율예측모형개발

Development of Model Estimating Fertility Rate for Korea

이삼식 · 최효진 · 은기수 · 장형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37-1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이삼식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813-9 93330



머리말

20세기 후반부터 한국사회는 아주 급격한 인구전환기를 경험하고 있다. 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까지 낮아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1.2 내외의 초저출산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저출산의 지속은 사회 전반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2006~2010)에 이미 약 20조원이 투입된 바 있으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에는 약 40조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주체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서 사회구조적 변화가 출산율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변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적당한 수단(tool)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책 투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가 하며, 더 나아가 정책의 방향 내지 유형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및 정책적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출산율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추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에서 인구추계를 위하여 출산율의 변화에 대한 가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한 가정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설정한 것일 뿐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출산율 예측모형은 사회구조적 변화 및 정책적 강도를 감안한 것으로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해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진은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격려를 해준 영남대학교 김한곤 교수, 강남대학교 이성용 교수, 본 원의 장영식 박사, 오영희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내용	12
제3절 연구방법	13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7
제3장 출산력 결정의 인구학적 요인	27
제1절 출산가능인구와 출산	28
제2절 출산시기와 출산	32
제3절 영아사망률과 출산	36
제4장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39
제1절 여성 경제활동참가와 출산	40
제2절 경기변동과 출산	44
제3절 여성 인적자본과 출산	50
제4절 경제적 요인 종합	51

제5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57
제1절 사회 변화와 출산	58
제2절 압축적 근대성과 출산	64
제3절 성인기로의 이행과 출산	67
제4절 성역할 분담과 출산	71
제5절 사회문화적 요인 종합	101
 제6장 출산율 예측 모형	109
제1절 분석방법	109
제2절 분석대상 및 변수	112
제3절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131
제4절 출산율 예측모형의 적용 사례	135
 제7장 결론	141
 참고문헌	145

표 목차

〈표 2-1〉 최근 공식 인구추계 시 출산율 예측치와 실측치 간 비교	22
〈표 3-1〉 일부 국가들의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	30
〈표 3-2〉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10	32
〈표 3-3〉 법률혼 이외의 출산 비율, 2000~2010	32
〈표 3-4〉 모의 연령별 출산비율	36
〈표 5-1〉 20~64세 개인의 생활시간 변화, 평일	87
〈표 5-2〉 부부의 생활시간 변화, 평일	90
〈표 5-3〉 부인의 무급노동 분담률에 관한 회귀분석, 평일 기준	93
〈표 5-4〉 부부의 유급노동시간별 부인의 무급노동 분담률의 변화, 평일 기준	96
〈표 5-5〉 부인의 무급노동 분담률에 관한 회귀분석, 주말 기준	98
〈표 5-6〉 부부의 유급노동시간별 부인의 무급노동 분담률의 변화, 주말	101
〈표 6-1〉 한국에서 각 요인과 출산율 간의 관계	116
〈표 6-2〉 출산율 예측 모형에 포함되는 요인 기술	129
〈표 6-3〉 출산율 예측모형에 포함된 요인의 패널그룹(국가) 평균	130
〈표 6-4〉 출산율 예측모형의 결과	132
〈표 6-5〉 패널그룹의 출산율 예측모형 결과와 실제 출산율 간의 차이, 2009	133
〈표 6-6〉 한국의 출산율 예측모형의 결과와 실제 출산율 간의 차이, 2006~2010	134

〈표 6-7〉 출산율 예측모형 적용 결과 예시, 1인당 국민소득만 증가할 경우	136
〈표 6-8〉 출산율 예측모형 적용 결과 예시, GDP대비 가족지출비율만 증가 시	136
〈표 6-9〉 출산율 예측모형 적용 결과 예시, 사회경제변수 조합 시	137

그림 목차

[그림 3-1] 연령별 출산율 패턴	29
[그림 3-2] OECD국가들의 혼외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2008	31
[그림 3-3] OECD국가들의 초혼연령(2008)과 합계출산율(2009)의 관계	33
[그림 3-4]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009	34
[그림 3-5] OECD국가들의 초산연령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2008	35
[그림 5-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 1980	76
[그림 5-2] OECD국가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 2008	77
[그림 5-3] 성평등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2005	80
[그림 6-1] 모형 개발을 위한 분석대상국가의 출산율, 1995~2009	114
[그림 6-2] 모형개발을 위한 분석대상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1995~2009	115
[그림 6-3]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	117
[그림 6-4] 혼외출산비율과 합계출산율	118
[그림 6-5] 초산연령과 합계출산율	119
[그림 6-6] 영아사망률과 합계출산율	120

[그림 6- 7] 여성(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	121
[그림 6- 8] 일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	122
[그림 6- 9] GDP 대비 가족정책지출 비율과 합계출산율	123
[그림 6-10] GDP 대비 보건정책지출 비율과 합계출산율	124
[그림 6-11] 남녀평등지수(GDI)와 합계출산율	125
[그림 6-12] 여성권한척도(GEM)와 합계출산율	126
[그림 6-13] 남성대비 여성의 대학진학비율과 합계출산율	127
[그림 6-14] 한국의 출산율 예측모형결과와 실제출산율 간의 차이, 2005~2010	135

A grey, cloud-like abstract graphic with the word 'Abstract' written in a black, handwritten-style font in the center.

Abstract

Development of Model Estimating Fertility Rate for Korea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model for estimating fertility rates for Korea under some conditions. The model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policies in prompt and adequate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model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xperiences by some OECD countries in Europe, having experienced the fertility increase trend and being economically well-developed, because Korea has never experienced the steady increase in fertility rate since 1960. This study collected about 20 years' time series data for each of selected countries and applied to the regression model, which is called a 'panel analysis' to take into considerations bot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spects of fertility change simultaneously.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to be included in the model, were explored through review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analyzing on determinants of fertility transition in recent years in the Korean context. They include

marriage rate, mean age at first childbirth, infant morality rate, ratio of births out of marriag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per capita GNI, ratio of female to male enrolled at university,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ratio of health expenditure to GDP, and ratio of family expenditure to GDP.

Simulation of the model for Korea and some panel countries showed a very small difference, less than 0.1, between the estimated rate and the observed rate for each year during 2005~2010. Thus, the model, as established in this study, is evaluated as accurate or well-fitted to a considerable extent.

요약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은 1960년에 6.0으로 아주 높았으나, 그 후 약 20년 만인 1983년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으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는 그 폭은 점차 둔화되었다 할지라도 지속되었다. 2001년 이후에는 10년 동안 1.3미만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였고,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10년간의 저출산현상 고착기와 유사한 상황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그리고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매년 당해 연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익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환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년도 저출산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년도 정책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출산율 통계는 익년에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당해 년도 말경에 수립하는 차기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단기적 출산율 변동에 따른 정책의 선택과 집중은 물론 개별정책의 투입강화 시기 및 정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시의 적인 정책 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20세기 후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 추이와 관련하여 정책 당국은 물론 학계를 포함한 많은 사회 주체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tool)은 부재한 실정이다.

결국 정책 추진, 출산 관련 여건 내지 분위기 변화, 문화적인 흐름 변화 등이 향후 출산율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극증만 가지고 있을 뿐, 전년도 출생통계만을 해석하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동태적인 추계가 아닌 사회 환경과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출산율 예측모형과 출산력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 및 국내외 사례 고찰, 기존 자료의 심층분석 등을 통해 규명하였다. 기존의 출산율 예측모형에 대해서는 비판적 고찰을 실시하여 동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모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출산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요인 중에는 적어도 서구 선진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요인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등을 통해 본 연구에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로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제2차 인구전환기가 오래 전부터 시작된 만큼 출산력이 1990년대 중반에 저점에 도달한 후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달리 한국 사회는 출산력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낮아졌을 뿐 다시 반등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의 기존 자료만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할 경우, 다중공선성 등의 통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출산율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선정 국가들은 현재 한국의 사회발전 정도(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기준으로 설정)를 상회하는 국가들로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의 출산율 저하와 이후 반등을 경험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OECD 1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궁극적으로 모형 구축에 적용된 자료는 분석대상 국가를 패널그룹으로 하여 출산율이 저점에 도달하고 반등하였던 시기인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출산력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의 통계치이다. 즉, 본 연구에서 출산율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를 합쳐 놓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는 패널분석모형(panel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동 모형에 포함된 변수 즉 요인들로는 중복효과 방지, 대표성 확보, 자료수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학적 요인으로 조혼인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 혼외출산비율, 경제적 요인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인당 국민소득,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남성대비 여성대학진학비율, 양성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 GDP대비 보건정책 지출비율, 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을 포함하였다. 물론, 혼외출산비율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며, 교육과 정책은 인적자본이나 자녀양육의 경제적 비용 경감 등의 차원에서 경제적 요인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양성평등정도를 나타내는 두 지표의 배치에 따라 두 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모형1 남녀평등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 모두를 그리고 모형2는 남녀평등지수(GDI)만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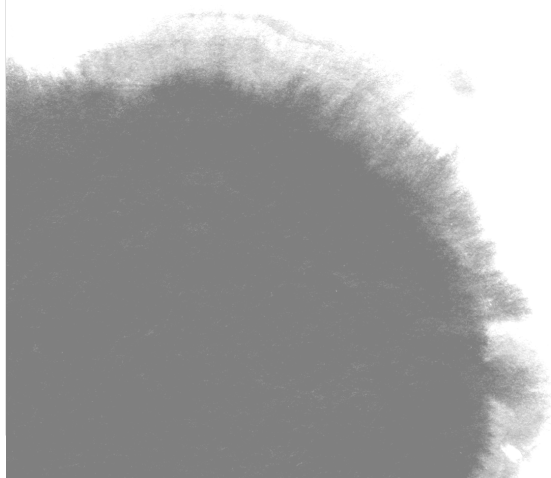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출산율 예측모형은 패널그룹(분석대상국가)과 한국의 최근 년도 출산율을 예측하여 실제 출산율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국가 합계출산율 차이는 0.1 미만으로 동 모형은 비교적 정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출산율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및 정책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중 일부의 변화를 가정할 경우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모형2를 활용하여 몇몇 중요한 요인들의 변화를 가정한 경우의 합계출산율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소득의 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GNI)이 5만불에 도달한다고 하여도 다른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합계출산율은 1.29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책을 강화하여 GDP대비 가족지출비율을 증가시킬 경우 출산율은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여건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GDP대비 가족지출비율이 현 일본수준(1.3%)으로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1.31, OECD 국가의 평균수준(2.2%)으로 증가할 경우 1.40, 그리고 프랑스 수준(3.7%)으로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1.55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어떠한 예측모형이라도 향후 출산율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출산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형에 포함된 요인들 이외에도 다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이 밝혔던 요인들 이외의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확한 예측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정책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실시하여 자료와 기법 상의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과 공동으로 출산율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01

서론



제1장 서론

인간의 출산력은 시기와 장소 및 집단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의 가임력(fecundability)과 출산력(fertility)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각 개인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 그러한 가임력과 출산력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출산력은 전쟁, 기아, 강제이주 등 특수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한 다른 인구변동요인 즉, 사망력(mortality)이나 인구이동력(migration)에 비해 국가 혹은 지역의 인구 변동을 결정하는데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인구 변동과 그로 인한 사회, 경제, 국방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출산력 변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출산력 변화에 대해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절(control)하는 노력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인류의 출산력은 시대적인 조류와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큰 흐름을 보여 왔다. 보건의료수준이 열악하고 출산에 대한 인위적인 조절 수단이 없거나 미흡한 시기에 인구동태적 특성은 고출산과 고사망으로 요약된다. 이후 산업혁명 등에 힘입어 보건의료수준이 발달하면서 인구동태적 특성은 저사망과 고출산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나 신멜서스주의자들에 의해 효과적인 피임법이 개발되고, 그러한 피임법이 20세기 초에 여성해방론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저출산과 저사망의 제2차 인구전환기에 접어들게 된다.

한국은 다른 후발 개발도상국가들과 마찬가지로 UN의 세계인구프로

그램(World Popul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피임법을 1960년대 초 대거 무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정부는 당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통합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이행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 출산율은 공식적으로 통계가 존재하는 년도인 1960년에 6.0으로 아주 높았으나, 그 후 약 20년 만인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으로 낮아졌다.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는 그 폭은 점차 둔화되었다 할지라도 인구대체수준에 이른 후에도 지속되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1.6 내외의 수준에서 다소 불규칙성이 존재하나 일시적으로 안정화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에 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되었던 시기로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를 겪은 후에 한국의 출산율은 다시 한 번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2005년에는 1.08까지 낮아지기도 하였다. 2001년 이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1.3미만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함으로써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약 10년간의 저출산현상 고착기와 유사한 상황을 보내고 있다. 즉, 지금 이 시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향후 현재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어 고착화될 것인가 아니면 더 낮아질 것인가 하는 비판적인 전망도 가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출산율은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낙관적인 전망도 가능한 시기인 것이다.

지난 약 5년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저출산의 원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비교적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이미 많은 연구보고서와 정부의 발표에서 저출산이 우리의 미래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주지한 바 있다. 실로 한국 사회에서의 장기적인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를 촉발시켜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불균형, 내수시장 위축과 자본스톡증가를 감소, 경제성장 둔화 등 비관적인 전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의거하여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지난 5년간 약 20조원을 투입하여 시행된 바 있다. 2011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투입될 예산 총액은 약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정부합동, 2010).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매년 당해 연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익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환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년도 저출산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연도 정책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출산율 통계는 익년에 발표(잠정 1/4분기, 확정 2/4분기 중)됨에 따라 당해 연도 말경에 수립하는 차기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성이 존재한다. 또한, 중단기적 출산율 변동에 따른 정책의 선택과 집중은 물론 개별정책의 투입강화 시기 및 정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시의적인 정책 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인류 역사적으로 출산력 변화는 국가 및 사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한국 사회에 국한하더라도 20세기 후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 추이와 관련하여 정책 당국은 물론 학계를 포함한 많은 사회 주체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tool)은 부재한 실정이다. 그로 인하여 정책 추진, 출산 관련 여건 내지 분위기

변화, 문화적인 흐름 변화 등이 향후 출산율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극증만 가지고 있을 뿐, 그때그때 통계기관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출생통계만을 해석하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출산율 예측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출산율 예측모형은 인구학적, 경제적, 정책적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모형은 저출산 관련 정책의 융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변화와 파급효과 등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연구내용

이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의 출산율 예측방법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한다. 그러한 비판적 고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출산율 예측모형의 접근법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출산율 예측모형을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할 출산력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차례대로 규명하는데 할애된다. 한편, 인구학에서 출산의 결정요인이라고 할 때는 결정요인(proximate determinan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라는 의미에서이다. 이 결정요인은 초혼연령, 피임여부, 낙태여부, 모유수유 등 결혼, 임신, 출산, 추가출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뜻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결정요인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proximate determinants가 아니다. 현재의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을 결정요인이라는 용어로 포괄하고 있다.

제3장에서 출산력 결정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은 주로 인구학적 이론이나 실증적인 사례를 통해 명료화한다. 제4장에서 출산력 결정에 대한 경제적 요인은 주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실시한 실증적인 연구 사례를 통해 도출한다. 한편, 정책적 요인은 기본적으로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요인에 포함하여 규명한다. 제5장에서는 출산력 결정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의 조사자료 즉, 시간활용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문화적 요인 자체와 그 특성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한국의 출산을 예측모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패널분석방법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모형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작업으로 패널그룹 즉 분석대상 국가들을 선정하고, 이어서 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변수로서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을 설정한다. 이와 같은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모형식을 추정한다. 개발이 완료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실제 응용을 시도한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한다.

제3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 기존 자료의 심층분석, 출산을 예측 모형 개발, 전문가회의 개최 등 네 가지 연구방법을 동원한다. 선행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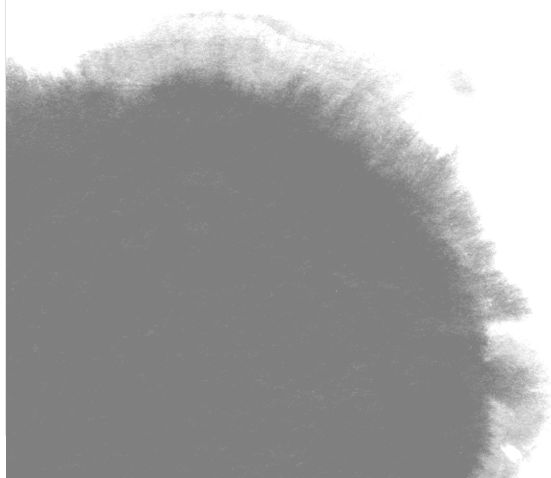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은 주로 출산율 예측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방법들에 대한 특성과 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자료의 심층분석은 출산율 예측모형에 포함할 변수 즉, 요인의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실시한다.

출산율 예측모형 개발에는 패널분석방법을 적용한다. 패널분석방법은 분석대상 자료를 횡단면적 자료 혹은 종단면적 자료를 사용하는 대신 패널자료를 활용한다. 패널분석방법은 종속변수로서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omitted variable)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으로 출산율이 급락한 후에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예측하기 위하여 서구의 선진국들을 패널그룹으로 선정하고, 각 패널그룹의 출산율 결정요인(변수)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구축하여 적용한다.

끝으로 연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전 과정에서 필요 시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02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선행연구 고찰

출산력의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면, 그 결과는 가급적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확고한 법칙은 없다(UN, 1956). 이에 UN(1956)은 출산력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하도록 권고하면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과거 추이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요인을 감안하여 예측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출산력의 과거 경험에 대한 분석방법이 일정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출산력을 제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 혹은 통계기관에서는 특히 인구추계를 위하여 출산력을 예측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출산력 예측방법들은 주로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라는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그 이유로 조출산율(CBR, Crude Birth Rate)은 한 년도의 총출생아수를 그해의 연앙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실제 출산할 능력이 없는 남성과 영·유아기 및 노년기 여성들이 분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출산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출산율(GFR, General Fertility Rate)은 한 년도의 총출생아수를 가임기간 여성(15~49세)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분모로 가임기여성 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임기 내에서도 연령별로 출산력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임기 여성의 연령에 따른 출산가능성(임신가능성), 임신조절 경향 및 실제 출산경험 등을 반영할 수 없

다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기존의 출산력 예측 방법에서는 합계출산율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합계출산율을 모의 연령별 출산율(ASFR, Age-Specific Fertility Rate)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추정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연령별출산율은 특정 연령의 여성 1명이 그 연령에서 낳은 평균 자녀수이며, 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을 거치면서 낳은 자녀수를 합산하여 합계출산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Shryock and Siegel(1976)은 출산력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기간 출산력 방법(Period-Fertility Method), 코호트 출산력 방법(Cohort-Fertility Method), 혼인 패리티 이행 방법(Marriage-parity Progression Method) 및 이들 방법들을 결합한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인구학적 개념으로서 기간출산율(period fertility)은 여성 1명이 어느 특정기간(보통 1년)에 출산한 수준이며, 코호트출산율(cohort fertility)은 보통 동시에 출생한 여성 집단이 가임기간 동안의 여러 연령을 지나면서 출산을 경험하는 율이다. 기간출산력방법은 최근의 연령별출산율이 향후 계속 유지되거나 일정한 비율로 변화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코호트출산력방법은 동일시기에 출생한 여성의 연령별출산율을 추적하여 출산 완료 시 누적된 출산율 즉, 합계출산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연령집단의 향후 출산패턴은 직전 코호트의 경험출산율 패턴을 이용하여 구한다.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연도에 태어난 여성의 출산율 수준을 가설적으로 합성한 기간 합계출산율에 비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전광희 외(2005)에 따르면, 실제 개인의 생애를 생애주기적 관점(life cycle perspective)에서 파악하는 코호트모형이 인구학적 행동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서 기간모형에 비해 유리하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인구추계를 위한 출산율 예측방법으로

코호트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출생코호트별 완결출산율을 추정하는데 로그감마모형을 적용하였다(통계청, 2006). 로그감마모형은 출산순위별 완결 출산율과 평균 출산연령을 추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성을 가진다. 출산순위별로 파라미터가 설정되어야 하므로, 출산순위마다 독립적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어려움이 있다. 빈도가 낮은 고출산순위에도 출산예측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재생산을 종결하지 않은 젊은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는 파라미터 추정결과와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재생산 과정을 종료한 출생코호트의 자료를 재생산 과정의 다양한 시점에서 실험적으로 우측절단을 경험하는 코호트의 경우의 추정치와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출산연령도 높아지기 때문에 출산순위가 높을수록 우측절단으로 인하여 여타 파라미터의 추정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Verma 외(1996)는 캐나다의 1993년 성별·연령별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1993~2016년의 출산력을 추정하였다. 출산력 추정을 위하여 Pearsonian Type III curve의 파라미터 모델을 사용하였다. 동 모델은 연령별 출산율 분배와 출생아수 추정을 더욱 정교하게 한다. 모형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로는 합계출산율, 평균 출산연령, 분산(variance), 출산력 첨도(the third moment of the fertility distribution or skewness) 등 4가지이다.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x) = y_0(1 + x/\infty)^{Y^\infty} e^{-YX}$$

$$\text{여기에서 } Y = 2\mu_2/\mu_3$$

$$\infty = (2\mu_2^2/\mu_3) - (\mu_3/2\mu_2)$$

$$\text{Mode} = \text{Mean} - 1/Y$$

Fukuda(2010)는 혼인과 출산행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출산력 추정방식을 보완하여 2050년까지 일본의 출산력을 추계한 바 있다. 출산율 추정은 코호트출산율(cohort total fertility rate)로 사용하였으며, 코호트출산율 산출은 2가지 단계에 의해 추정되었다. 우선, Coal-McNeil에 의해 확장된 일반로그감마분배모델(GLG모형, Generalized Log Gamma Distribution Model)을 이용하여 코호트 연령별 출산율(ASFR)을 출산순위별로 산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모델은 젊은 층의 출산력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 믿을만한 CTFR을 산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0년생 코호트를 CTFR의 수준이 일정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타겟코호트로 선정하여 CTFR을 추정하였다. 1971~1975년생 보다 젊은 코호트의 ASFR는 1990년생의 CTFR값에 점진적으로 근접하였고, 1990년생 보다 젊은 코호트 또한 1990년생 CTFR 수준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추계시스템은 1971~1975년생 보다 젊은 코호트의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에 보다 안정성을 갖게 되었다.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CTFR &= (1 - \gamma) * CEB * \delta \\ &= (1 - \gamma) * (CEB * (afm) * \kappa) * \delta\end{aligned}$$

r : 50세 미혼율, CEB : 부부의 완결출산력

δ : 이혼, 사별, 재혼, 혼외출산의 영향

CEB*(afm) : 평균 초혼연령을 통해 기대되는 부부의 완결출산력

κ : 혼인 출산력(marital fertility) 변화의 계수

이와 같이 대표적인 출산력 예측방법으로 기간출산력방법과 코호트출산력방법은 한국과 일본 등 많은 통계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측방법은 궁극적으로 앞선 코호트들의 경험 패턴이 향후에도 유

지되거나, 경험을 통해 발견된 일정한 법칙에 의거하여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선 코호트들의 경험으로는 위 공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혼율, 평균 초혼연령, 평균 출산연령, 연령별출산율, 완결출산력 등 인구동태적인 요소들만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점들로는 우선 인구동태적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후 코호트가 선 코호트의 경험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며, 일정한 변화율에 따라 변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된 이유로 기간출산력방법은 서로 다른 코호트들이 특정 시기의 동일한 환경이나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젊은 코호트들이 직면할 미래의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코호트출산력방법도 경제위기 등 시대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한 요인들이 개인의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최근에 올수록 많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출산행태 내지 출산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들 요인들의 영향이 출산력 예측에 사용하고 있는 몇몇의 인구동태적인 지표들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하여 최근 미국 상무성 인구센서스국(2009)에서는 인구추계를 위한 출산율 예측 시, 그 결과가 개별국가의 환경을 감안하여 수용 가능한 것인가를 진단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즉, 출산율 예측 시에는 여성의 교육수준 및 노동시장참여율, 가족정책의 영향, 피임여성비율, 혼인연령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흐름과 정책 등 모두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율 예측과 관련한 과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국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주로 인구 추계 시 인구동태적 변화만을 감안하여 예측한 출산율들은 이후 실측치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현상들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 게다가 2006년 이래 정부는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정책의 강도에 따른 출산율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구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현상 및 정책의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표 2-1〉 최근 공식 인구추계 시 출산율 예측치와 실측치 간 비교

(단위: 명)

	실측치	1996추계	2001추계	2005추계	2006추계
중위가정					
2000	1.47	1.71	-	-	-
2005	1.08	1.71	1.37	1.19	-
2010	1.23	1.74	1.36	1.21	1.15
고위가정					
2000		1.78	1.47	-	-
2005		1.84	1.43	1.21	1.08
2010		1.93	1.45	1.27	1.28
저위가정					
2000		1.64	1.47	-	-
2005		1.56	1.35	1.17	1.08
2010		1.52	1.32	1.14	0.83

주: (현수준)은 2006년도 인구추계에서만 설정한 가정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12.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1(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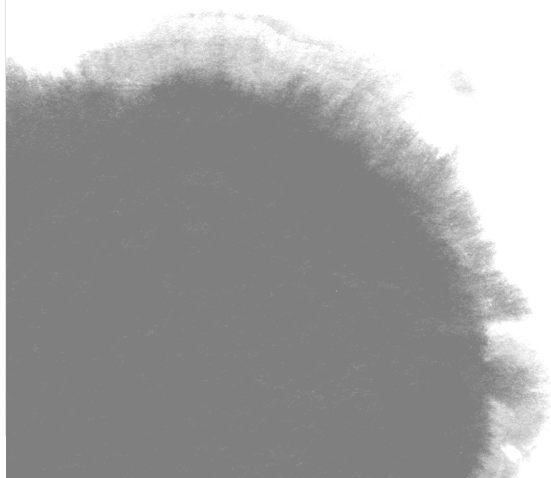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06.11.

본 연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된 이후에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측정하기 위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과거에 경기 불황을 경험한 이후에 출산율이 증가한 국가들로 선정하도록 한다. 한

편,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에서의 경제적 요인이 출산을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개인이나 개별가구의 소득수준, 고용상태 등의 변화가 출산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파악하거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이나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상실되는 기회비용의 변화가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이 미시적 접근방법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거시적 접근은 국가경제 또는 경기변동이 출산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출산을 결정에 관한 실증분석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시적 접근은 개인이 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관한 의사결정이어서 국가의 출산율 변화와 같은 집단적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 집계변수를 사용한 거시적 접근이 더 유효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접근보다는 거시적 접근을 통한 실증분석 사례를 더 많이 참고하고자 한다.

03

출산력 결정의 인구학적 요인



제3장 출산력 결정의 인구학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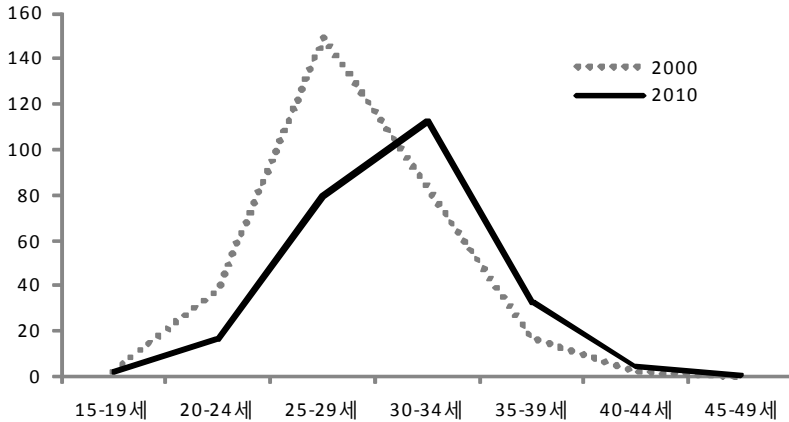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인구학적 요인은 가임기인구, 혼인율, 초혼연령, 초산연령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은 후술하게 될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구학적 요인 중 일부는 경제적 요인이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예로, 가임기인구에는 생리적인 문제로 혹은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님으로써 출산이 억제되는 사회관습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출산을 할 수 없는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 초혼연령은 출산 가능시기를 그리고 초산연령은 실제 출산 시작시기를 의미한다. 이들 시기가 늦추어질수록 불임증 확률이 높아지며, 실제 가임기간도 단축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출산력보다 전체 출산율을 다루는 경우에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가임기인구 규모나 구조 등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영아사망률도 자녀 수에 대한 보전 심리와 연계되어 출산력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이들 인구학적 요인을 출산가능인구와 출산시기 및 영아사망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제1 절 출산가능인구와 출산

우선, 가임기여성인구(15~49세)의 규모 및 구조가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임기여성인구의 규모 증가는 출생아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가임기여성인구의 증가가 반드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만약 가임기여성인구의 증가에 따라 출생아수가 증가하나, 출생아수 증가율이 가임기여성인구의 증가율보다 낮다면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가임기여성인구 내에서도 연령구조에 따라 출산율은 달라진다. 출산이 가장 활발한 핵심가임인구(25~34세)의 비중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출생아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출산율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그 역도 성립되어, 출산이 활발한 연령층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전체 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로 2010년 연령별 출산율(여성인구 천명당 출생아수)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 초반으로 112.4명에 이르며, 다음으로 20대 후반으로 79.7명으로 나타난다. 과거에 20대 후반에서의 출산율이 30대 초반에서 비해 높았던 것이 만혼화 및 만산화 현상으로 인하여 2006년부터 역전된 것이다. 20대 전반의 출산율은 16.5 그리고 30대 후반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32.6으로 낮은 수준이다. 물론 10대 후반과 40대의 출산율은 거의 무시할 수준이다. 이와 같은 가임여성인구 내 연령별 출산력 차이는 전체 출산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3-1] 연령별 출산율 패턴



자료: 통계청 KOSIS.

혼인정도와 혼인문화는 실제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임가능’ 인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혼인 정도는 조혼인율로 측정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혼인율이 높은 이른바 보편혼을 지향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높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혼인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법률혼 이외의 출산이 증가하면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가임인구의 혼인율과 출산율의 관계는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다. 유교문화권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통적 가톨릭문화권의 남유럽국가들과 같이 법률혼을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혼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의 경우 조혼인율은 1970년에 비해 2009년 2.07, 4.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합계출산율은 3.38, 0.76 감소하였다.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1970년과 2009년 조혼인율은 각각 2.99, 3.34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86, 1.0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혼인과 출산율의 연관성이 다소 미약하게 나

타난다. 스웨덴의 경우 조혼인율은 1970년과 2009년 0.21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2.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동 기간 동안 조혼인율의 감소가 3.78로 크나, 출산율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

〈표 3-1〉 일부 국가들의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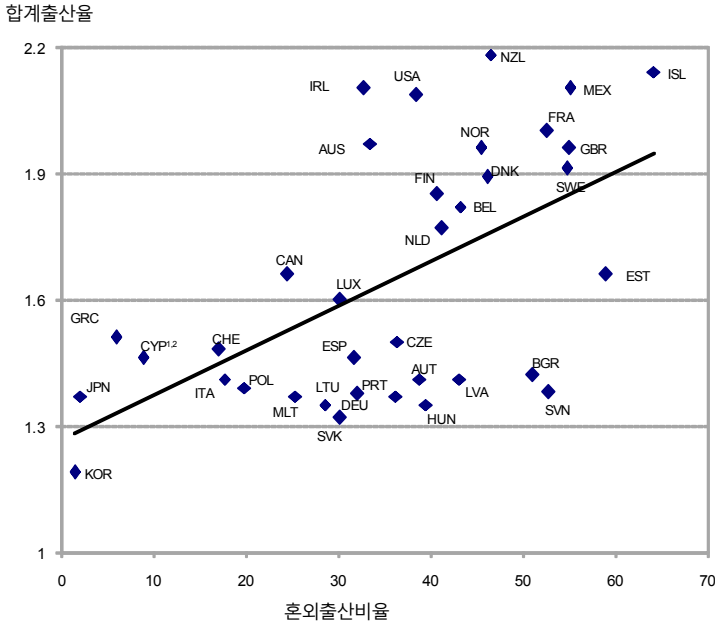
(단위 : 명)

	조혼인율			합계출산율		
	1970	2009	2009-1970	1970	2009	2009-1970
한국	9.20	7.13	2.07	4.53	1.15	3.38
일본	10.00	5.71	4.29	2.13	1.37	0.76
그리스	7.67	4.68	2.99	2.39	1.53	0.86
이탈리아	7.35	4.01	3.34	2.43	1.41	1.02
스웨덴	5.38	5.17	0.21	1.94	1.94	-
프랑스	7.75	3.97	3.78	2.48	1.99	0.49

자료 : Eurostat(2010), OECD(2010),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2010).

실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혼인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혼외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높은 수용성 때문일 것이다. 혼외출산율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프랑스 52.6%, 스웨덴 54.7% 등이며 OECD 평균은 36.3%로 나타난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은 1.5%, 일본은 2.0%로 그리고 남유럽국가들의 경우 그리스 5.9%, 이탈리아 17.7% 등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OECD, Family Database, 2011년 8월 검색). OECD국가들의 혼외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2] OECD국가들의 혼외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2008



주 : 이하 알파벳 순 AUS(호주),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BGR(불가리아), CAN(캐나다), CHE(스위스), CYP(키프로스), CZE(체코), DEU(독일), DNK(덴마크), ESP(스페인), EST(에스토니아),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GRC(그리스), HUN(헝가리), ISL(아이슬란드), ITA(이탈리아), IRL(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LTU(리투아니아), LUX(룩셈부르크), LVA(라트비아), MEX(멕시코), MLT(몰타),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VN(슬로베니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의 대부분이 법률혼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혼인율 혹은 미혼율은 출산수준을 예측하는 데에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가임기여성(15~49세) 전체의 미혼율은 1970년대 31.5%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5년 37.0%까지 올라갔으며, 2010년에는 40%를 상회하였다. 특히, 핵심가임여성층인 25~29세의 미혼율은 1970년 9.7%에서 2010년 69.3%까지 상승하여 이들 연령층의 1/3이하만이 기혼상태로 나타났다.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1.4%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들어 10%를 상회하였으며, 2005년 19.0%, 2010년 29.1%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표 3-2〉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10

(단위: %)

구분	여자 연령층							
	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1970	31.5	97.1	57.2	9.7	1.4	0.4	0.1	0.1
1975	36.0	97.4	62.5	11.8	2.1	0.7	0.3	0.2
1980	36.5	98.2	66.1	14.1	2.7	1.0	0.5	0.3
1985	36.3	99.1	72.1	18.4	4.2	1.6	0.7	0.4
1990	36.4	99.5	80.5	22.1	5.3	2.4	1.1	0.4
1995	34.6	99.2	83.3	29.6	6.7	3.3	1.9	1.0
2000	34.9	99.3	89.1	40.1	10.7	4.3	2.6	1.7
2005	37.0	99.6	93.7	59.1	19.0	7.6	3.6	2.4
2010	40.6	99.6	96.0	69.3	29.1	12.6	6.2	3.3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한국 사회에서 미혼율이 출산수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혼외출산의 발생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혼외출산비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2%수준으로 아주 낮다. 그만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및 제도적 수용성이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낮은 혼외출산비율은 지속적으로 만혼화현상과 결부되어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촉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3〉 법률혼 이외의 출산 비율, 2000~2010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혼인외의 자	0.9	1.0	1.1	1.3	1.3	1.5	1.5	1.6	1.8	2.0	2.1

자료: 통계청, 2010 출생통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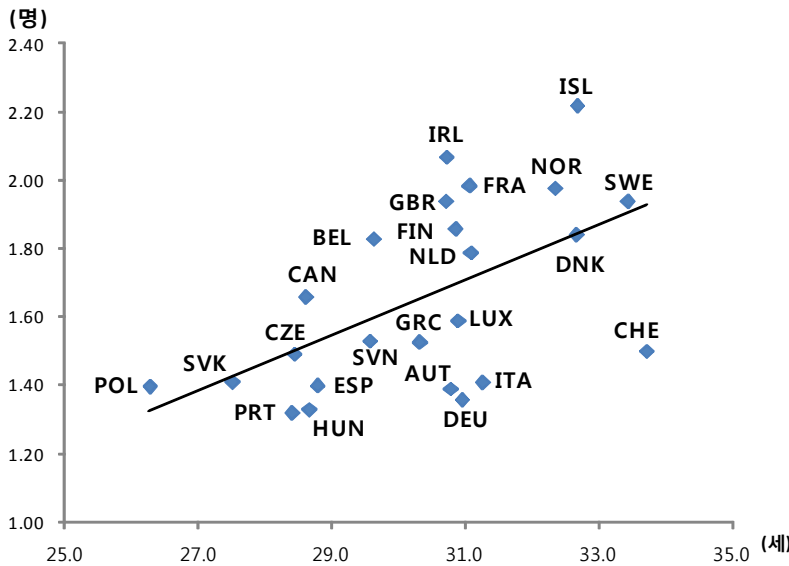
제2절 출산시기와 출산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혼인출산비율이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

직도 대부분 국가들 특히,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나 남유럽국가들에서는 법률적인 초혼 연령이 사회적으로 출산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기간 단축, 가임력 저하(유사산, 불임 증가), 임신 부와 태아의 건강이상증가, 늦어지는 자녀양육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자녀출산 축소 경향 증가 등으로 인하여 출산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OECD 국가들의 초혼연령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면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OECD국가들의 초혼연령(2008)과 합계출산율(2009)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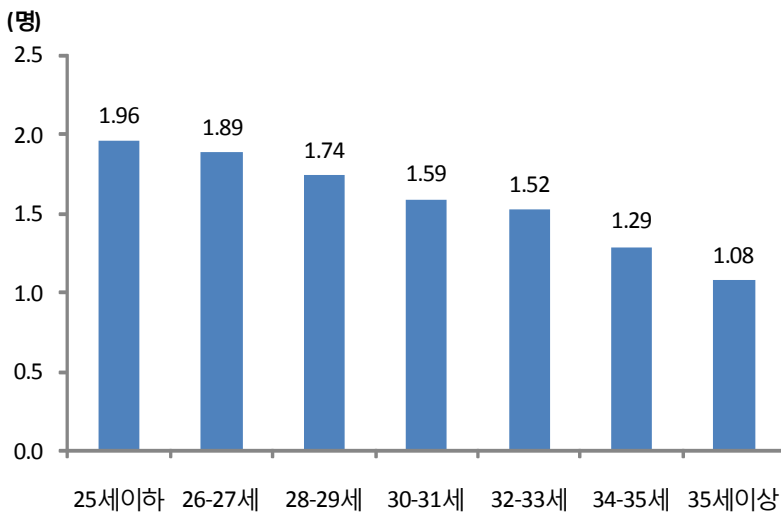


주: 이하 알파벳 순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U(독일), DNK(덴마크),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GRC(그리스), HUN(헝가리), ISL(아이슬란드), ITA(이탈리아), IRL(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VN(슬로베니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이와 같은 초혼연령과 출산력 간의 부(-)적 관계는 혼외출산비율이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아주 낮은 우리나라에서 보다 명료하게 나타난다. 2009년에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 당시 40~44세인 기혼여성 중 35세 이상에서 결혼한 집단이 평균 1.12명을 출산하여 25세 미만에서 결혼한 집단이 평균 1.95명을 출산한 것에 비해 1.7배 덜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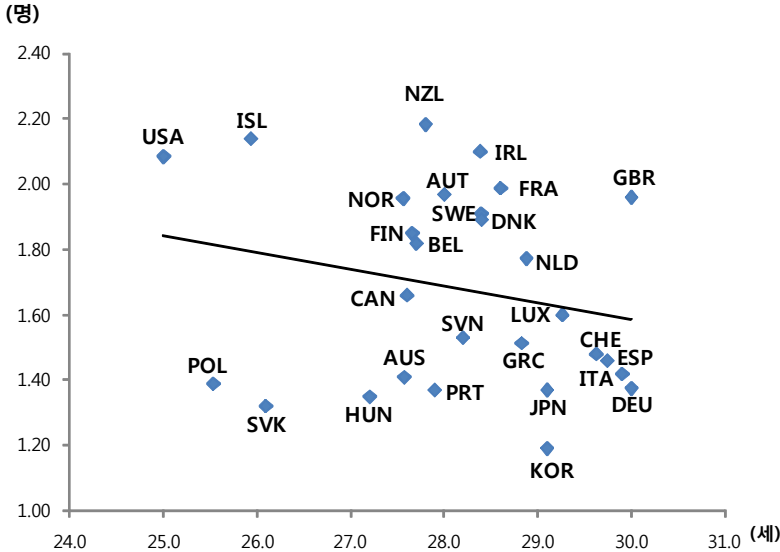
[그림 3-4]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009



자료: 이삼식 외(2009).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혼연령과 출산력 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최초 출산 시기 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결혼을 하고나서도 여러 이유로 인하여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사회일수록 출산시기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혼외출산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더 명료하게 나타난다. OECD 국가들 중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의 국가에서 초산연령이 높아질수록 합계출산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 OECD국가들의 초산연령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2008



주: 이하 알파벳 순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U(독일), DNK(덴마크),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GRC(그리스), HUN(헝가리), ISL(아일랜드), ITA(이탈리아), IRL(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VN(슬로베니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만혼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연령에서의 임신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0.1세로 처음으로 30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히 둘째 혹은 셋째아 연령도 32.01세, 34.04세로 증가하였다. 모의 연령별 출산을 살펴보면, 30세 이상에서의 출생아수가 전체 대비 62.7%(35세 이상에서는 17.0%)로 과거보다 고연령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고령 산모에서 고혈압, 자궁근종, 이상태위의 증가와 분만시간 지연, 기계분만, 조산, 주산기 사망률 증가, 저체중아, 수유곤란아 증가 등 임신에 의한 합병증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재호 외, 2006).

〈표 3-4〉 모의 연령별 출산비율

(단위 : 천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체	435	448.2	493.2	465.9	444.8	470.2
20세미만	0.7	0.7	0.7	0.6	0.6	0.6
20~24세	7.5	6.8	6.5	6.1	5.6	5.2
25~29세	40.2	38.6	37.9	36.3	35.0	31.3
30~34세	40.8	41.9	41.7	42.6	43.2	45.6
35~39세	9.3	10.5	11.7	12.8	13.6	15.1
40~44세	1.2	1.2	1.3	1.4	1.6	1.9
45세 이상	0.1	0.1	0.1	0.1	0.1	0.1

주 : 모의 연령미상은 제외
자료 : 통계청, 출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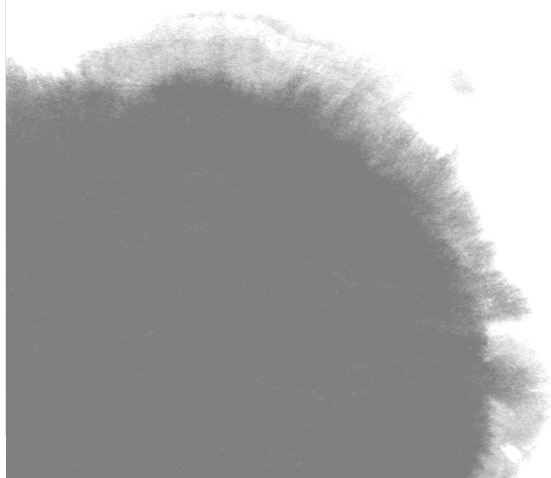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제3절 영아사망률과 출산

영아사망률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수준 및 국민의 보건복지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 출생아 1,000명당 사망한 영아로 표시된다.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기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에 대한 확신감이 낮아 예비로 추가적인 출산을 시도하여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영아사망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기 출산자녀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원하는 자녀의 수를 달성하면 단산을 하게 되어, 출산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2007년 3.5명, 2008년 3.4명, 2009년 3.2명, 2100년 3.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OECD 34개국의 영아사망률(4.4명)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다소 낮은 편이나, 여전히 일본(2.4명), 스웨덴(2.5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1).

04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제4장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현상은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결혼과 출산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일국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 그리고 기술인데 노동의 투입이 감소하는 상황은 경제성장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10~20년 전에 이미 저출산을 경험한 서구¹⁾ 및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다수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과거의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적 요인을 분석해내는 것과 미래의 출산력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과거의 인구변동이 미래에도 비슷하게 계속된다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과거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출산력이 세계 최저수준이지만 출산율 변동에 미친 요인은 서구 국가들이 10~20여 년 전에 겪었던 출산율 저하의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개연성이

1)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 하락이 서서히 나타나다가 1990년대 초반에 그 추세가 거의 멈추어서 합계출산율이 1.8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합계출산율이 1.3명 정도까지 하락을 경험하였다.

높다. 특히 경제적 요인은 어느 한 국가에만 적용되고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수성이 별로 부각되지 않아서 과거의 이론적 분석이 상당부분 미래에 대한 예측에도 적용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력의 경제적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내외 실증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여성의 교육(인적자본개발), 여성의 임금,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등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 측면과 경제위기에 초점을 둔다.

제1 절 여성 경제활동참가와 출산

맬서스 이래, 소득 증가가 인구 증가를 초래한다는 단순한 사고가 바뀌기 시작한 이유는 1950~1960년대 소득의 급증과 출산율 급감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산율의 감소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설명하는 이론이 나타났다. Becker(1981)의 개인의 노동-여가 선택이론에 기초한 시간가치모형에 따르면, 임금이 증가하면 시간의 가치가 증가하여 시간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활동(육아)의 기회비용²⁾이 상승하므로, 이러한 활동을 줄이려는 음(-)의 대체효과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증대로 인한 자녀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양(+)의 소득

2) 출산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고려할 수 있다. 출산의 직접비는 특히 아 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필수적인 시간비용과 자녀의 인적자원 축적을 위한 재화와 시간투자를 포함한다. 출산의 기회비용을 뜻하는 간접비는 여성이 출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할 때 잃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출산의 간접비는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노동활동 단절을 겪게 되는 경우 잃어야 할 소득이라든가, 경험 손실 또는 인적 자본의 감퇴를 포함한다(조운영, 2006). 또한 출산 및 양육 후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가가 이슈가 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경우 정규직 여성들은 노동시장 밖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술침식(skill erosion) 등으로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 확률이 하락하여 비정규직으로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박승희·김사현, 2008).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출산에 대한 여성 임금의 효과가 다르다고 가정한다. 자녀 양육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보다 여성(어머니)의 시간집약적 투입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녀의 기회비용은 다른 재화의 기회비용보다 높아진다. 따라서 여성의 소득(임금)이 높아질수록(다른 재화보다) 자녀를 가지는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은 낮아지게 된다. 시간가치모형은 자녀 양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여성에게 있으며 양육의 비용은 남성의 소득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남성의 소득은 자녀 출산에 대하여 양(+)의 소득효과가 있는 반면, 여성의 소득은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더 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점점 현실성을 잃어가게 된다.

Easterlin(1987)은 출산율은 절대적인 소득수준이 아니라 각 개인이 속한 준거집단(코호트)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측정되는 상대소득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상대소득’이란 젊은 세대의 물질적 욕망(희망하는 생활수준)에 비례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진입, 가족 형성, 결혼, 출산 등에 관한 젊은 세대의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이론은 Becker의 정태적인 분석과 달리 가구나 개인 선호의 시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세대 간의 소득 차이나 세대별 인구수의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동태적인 관점에서 출산을 결정요인을 찾고 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i) 부모 세대의 노동자 수에 비해 젊은 세대의 노동자 수가 작아질수록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며, (ii)부모 세대의 평균 임금에 비해 젊은 세대의 평균 임금의 비중이 커질수록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며, (iii)결혼과 출산을 많이 한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가 되는 20년 정도 후에는 노동시장의 경쟁으로 인해 새로운 자녀의 결혼과 출산은 감소한다고 한다.

Becker의 이론과 Easterlin의 이론은 서로 보완적일 수 있다. Becker의 가설에 따라 (절대적)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수가 증가하고, Easterlin

의 가설에 따라 과거 부모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의 (상대적)소득이 증가하면 출산이 증가할 수 있다(김현숙 외, 2006). OECD(2005)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OECD국가에서 횡단면으로 분석하면 소득이 높은 여성(30~39세 기혼)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율이 낮았다. 그러나 시계열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단순한 패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김현숙 외, 2006).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Becker, 198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자녀들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을 기피하게 한다. 그런데 선진국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0년대에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없어지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증가하고 있다(Billari and Kohler, 2004; 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4). Ahn and Mira(2002)는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의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의 횡단면 상관관계수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양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여성임금이 출산율에 대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능가한다고 주장한다(김현숙 외, 2006). 특히 여성이 양육과 일을 양립하게 만드는 보육정책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사회적 분위기가 OECD 국가의 여성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상승의 병립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나라들은 덴마크,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으로 출산과 일을 장려하는 가족정책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해 출산자녀 수를 줄이는 국가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으로 정부의 정책이 매우 부족한 국가들이다(김현숙 외, 2006). 이러한 경험적 사실은 높은 출산율과 높은 여성경제활동참여율 또는 고용률(실업률과 역 관계)이 더 이상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

님을 보여주고 있다(김현숙, 2006; 류연규, 2005). 이는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출산 후 보육·육아복지가 잘 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이러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출산율 저하로 연계되기 쉽다(이성용, 2006).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6)는 우리나라에서 기혼여성이 거주하는 도시규모가 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에 종사할수록, 그리고 전월세로 거주할 경우에 출산수준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류기철·박영화(2009)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혼위험도 모형을 추정하여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반면, 김우영(2007)은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기혼여성의 출산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여성의 출생시기의 영향은 그간 진행된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여성의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외(2006)는 ‘2003년도 전국출산력조사’를 이용하여 기간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연구결과 여성의 임금 상승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산시점을 미루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민희철(2008)도 같은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의 임금 상승이 첫 번째 자녀의 출산 시점을 미루는 효과를 발견하였으며, 배우자 임금의 상승은 두 번째 출산시점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김정호(2009)는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부터 2005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간격을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므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2절 경기변동과 출산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적이다. 경기가 악화되면(즉, GDP가 감소하면) 특히 첫째 자녀 출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 출산율도 대부분 회복이 되거나 적어도 감소 추세가 완화된다고 한다(Neels, 2010). 대부분 OECD국가에 있어서 전체 실업율과 출산율의 관계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5). 즉, 출산율은 실업률이 낮을 때 올라가고 실업률이 높을 때 낮아졌다. Adesa(2004)는 여성의 실업율과 출산율은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경제위기와 출산율(또는 결혼) 간의 반비례 관계는 새로운 일이 아니며, 19세기나 20세기 초의 선진국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³⁾ 경기 악화가 일시적인 출산율 하락을 가져온 사례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흔히 않게 발견된다(Sobokta et. al., 2011).

스웨덴의 출산율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 등으로 인하여 1970년대 말 1.6명까지 감소하였으나 1985년부터 증가하여 5년만인 1990년에 인구대체수준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과 정책 확대⁴⁾에 기인한다(이삼식 외, 2008). 그런데 스웨덴 경제는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게 되어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고용도 계약직이 증가하는 고용불안정이 심화되었다. 정부의 재정도 악화되어 보육정책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로 출산율은 1999년에 1.52명까지 급락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후퇴는 직·간접적으로 양육비용의

3)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오일 쇼크가 가져온 1970년대의 경제위기, 그리고 1989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 시 경제적 충격이 출산율의 변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는 Sobokta et. al.(2011)을 참조하도록 한다.

4) 당시 스웨덴 정부는 부모휴직기간 확대, 아동수당 증대, 공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정책을 확대하였다.

증가를 초래하여 출산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Hoem and Hoem, 1996). 이 시기에 저임금여성의 첫째아 출산율이 고임금여성의 출산율보다 낮았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있다(Andersson, 2000). 1999년 이후에는 실업률이 1990년의 10%에서 5%로 급감하고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다시 75%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2006년 출산율도 1.85명으로 회복되었다. Santow and Bracher(2001)의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에서는 GDP의 감소를 의미하는 경제위기 시에는 보통 때와 비교하여 첫째 자녀의 출산이 21%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 결과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실업률과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변수를 계량적으로 통제한 이후에도 계속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였다. 이처럼 스웨덴의 경우는 경기변동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경기 상승기에는 임금이 상승하고 경제사회안정대책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상승하게 되었다. 경기 하강기에는 고용, 소득, 복지수준이 낮아지면서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하락하게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삼식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의 GDP 성장률과 출산율은 약 6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에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지속되었던 ‘취직 빙하기’로 출산율이 1989년에는 1.57명까지 하락하였다.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2005년에는 1.26명을 기록하였다.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평생직장 보장’ 상실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로 여성의 결혼이 지연되는 만혼화가 출산 형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Ogawa, 2003). 또한 여성의 고용불안은 여성의 교육 연장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만혼화를 증대시켰다. 일본 후생성은 2006년 출산율이 1.32로 다소 회복된 것이 경기회복의 영향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삼식 외(2007)는 일본의 GDP 성장률과 출산율

은 약 4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출산율 증가 정책은 그 효과가 스웨덴이나 프랑스에 비해 상당히 약했던 것 같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정책이 폐지되더라도 합계출산율에는 0.01~0.02명 정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8).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하게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가 자녀수의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인 자녀양육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Kato(2000)의 연구에서는 연립방정식 체제를 통해 일본의 출산율 하락 요인을 추정하였는데 가계소득, 실질임금, 최초혼인연령과 교육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고 한다(최경수, 2004).

독일 통일(1990년 10월 3일) 이전에 동독의 출산율은 출산장려정책의 결과로 서독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1980년 동독과 서독의 출산율은 각각 1.9와 1.4였고, 1980년대 동안 동독은 서독에 비해 약 0.4~0.5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독일 통일 후 동독의 출산율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통일 1년 후인 1990~1991년의 1년간 동독 지역 여성 1명당 출산자녀수가 1.5에서 0.9로 40%가 급락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젊은 여성의 첫째 자녀수 감소와 중장년 여성의 둘째 및 셋째 자녀수 감소에 기인한다. 그런데 동기간 중 서독의 출산율은 변동이 없었다(최숙희·김정우, 2005). 이러한 동독 지역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아마도 독일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폴란드는 1970년대 초반의 출산율인 2.2를 1980년대 말까지 계속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시장경제로 급격하게 이행하게 된 1991년 이후 폴란드의 출산율은 급락하였고 2002년에는 1.24까지 하락하였다. 출산율의 하락은 전 연령층의 여성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20~24세와 25~29세의 여성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 전반 이후 첫째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90년대 후반 폴란드의 출산율 급락은 첫째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의 평균연령 상승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Philipov and Kohler, 1999).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폴란드는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의 급감, 실업률 급증 등 소위 체제전환불황(transition recession)을 겪게 된다. 1990년 폴란드 실업률은 1%미만이었으나 1992년에 12%로 급증하였다. 2002년 실업률은 18.1%로 유럽 평균의 2.5배에 달하였다(최숙희·김정우, 2005). 1990년대 폴란드의 출산율 하락의 이유는 첫째,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의 경제 침체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서구사상의 전파와 가족의 현대화로 인해 출산패턴이 자녀를 적게 가지는 서유럽형으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는 가족관련 급여, 자녀수당, 출산수당 등 주요 출산장려정책의 후퇴를 들 수 있다(최숙희·김정우, 2005; Billingsley, 2010). 러시아, 동독과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청년실업률과 출산율 간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Eberstadt, 1994; Witte and Wagner, 1995). 최근 Billingsley(2010)는 유럽의 체제전환국들에서 GDP 증가율과 출산율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20세 이상 모든 여성에 해당되었다고 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이 결혼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가 있다(Billari et. al., 2002). 스페인에서 청년실업률이 높았던 1990년대에 남성의 실업기간이 길수록 결혼과 첫째아 출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Ahn and Mira, 2001). 청년실업률이 비교적 높았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초저출산율을 보인 반면에 청년실업률이 낮았던 포르투갈은 비교적 출산율이 높았다고 한다(이성용, 2006).

한번 경제위기가 닥치고 그것의 무서움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되면, 미래의 경제위기가 예상되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미래의 경제위기 정도를 감지하는 지표인 ‘소비자 심리지수’(consumer confidence indicator)를 사용하는 실증분석 연구가 있다. Van Giersbergen and de Beer(1997)는 네덜란드 시계열 자료를 사용한 실증분석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10포인트 상승하면 2.25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가 1년에 약 3,000명(전체 출산아 수의 약 1.5%)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최근에는 Fokkema et. al.(2008)은 2년의 시차를 준 회귀분석모형을 통하여 네덜란드의 소비자 심리지수 변화와 기간 출산율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포인트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4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은 첫째자녀의 출산 증가였고 나머지 절반은 둘째자녀의 출산 증가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그 이후에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평생직장’ 개념에서 일용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증가하여 청년세대가 느끼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다. 취업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은 특히 남성의 결혼을 지연시키는 주요인이 된다(Billari and Kohler, 2004; Gauthier and Hatzius, 1997; Ahn and Mira, 2001). 심지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1990년의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은 27.9세로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에는 0.7세가 증가한 28.6세였으나, 평균 결혼 연령은 2004년에는 30.6세로 1997년보다 2.0세가 증가하여 외환위기 전 같은 기간 동안과 비교해서 3배나 결혼 연령의 증가폭이 컸다. 이러한 증가폭은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 증가폭보다 더 높다(이성용, 2006). 최경수(2004)는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노동시장이 악화되었지만 그 영향은 주로 남성노동시장에 국한된 것이며, 추세적으로 남성취업률과 출산율이 모두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연관성이 낮다고 본다.

김현숙 외(2006)에서는 출산을 결정에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들의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정부의 정책변화와 사회적 요인과 같은 외생적 변화(exogenous shift)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출산 등 경제주체들의 내생적 변화(endogenous shift)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거시경제 변수들은 연령대별 출산율, 여성의 단위시간당 임금, 남성의 연간소득,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혹은 고용률, 상대소득의 대리변수 등이며, 실증분석 대상 가설은 Becker의 신가계경제학 이론과 Easterlin의 상대소득 가설 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상승은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에 보다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고, 남성소득은 젊은 연령층보다 나이가 많은 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세대 간 상대소득의 차이는 연령대가 젊은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광언 외(2006)도 거시적 접근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임금 상승과 그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을 감소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삼식 외(2008)의 연구는 우리나라 출산을 결정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거시적인 접근법으로 혼인과 출산의 시기(period), 연령(age), 출생코호트(cohort)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수준 APC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95~2006년간 분기별이다. 경제적 지표로는 연령별 실업률, 연령별 고용률, 부모 세대의 실업률 및 고용률,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을 사용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본인의 실업률이 높았을 때 출산이 감소하였고,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았을 때 출산이 감소하였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 첫째 자녀는 물론 둘째 자녀의 출산이 연기 또는 기피되어 전반적인 출산력이 축소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기가 호황 국면에 들어서고 그것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

하면 젊은 층의 전반적인 출산력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2006년과 2007년에 한국 사회에서 합계출산율이 조금 이나마 증가한 것이 호전된 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3절 여성 인적자본과 출산

산업화가 진전되고 노동의 양보다 질을 강조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향상이 부가되었다. 이에 따라 자식의 교육 관련 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여성 자신도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혼이 지연되고 첫 출산의 평균 나이가 높아져 아이를 더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고학력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가 높아지면 아이보다는 다른 가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이삼식 외, 2005). 고학력 여성은 피임, 건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다. 고학력 여성은 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출산을 위해)노동시장을 떠나는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고학력 때문에 출산을 연기하는 것은 결혼이 곧 출산을 의미하는 남유럽 국가나 동아시아국가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여성은 결혼을 늦출 것이고 이는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진다(김현숙 외, 2006).

OECD(2005)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OECD국가 간 패널데이터에서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과 출산율 간의 관계가 1980년대에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 초부터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약화되어 고학력 여성이 많은 OECD국가의 출산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력별 30~39세 여성의)Luxemburg

Income Survey 자료를 사용한 시계열로 살펴보면, 모든 국가와 연도에
서 고학력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출생아 수가 작았으나, 학력별 출산
율의 변화는 국가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여서 일반성을 찾아볼 수 없었
다고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젊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학력
수준이 비슷하여 앞으로는 학력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덜 중요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학력에 따라서는 더 높은 학력의 배우자를 만나려는
선택적 결혼 assortative mating의 증가 추세에 의한 학력 간 격차와
학력의 세대 간 세습에 의해 출산율 차이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
다.

제4절 경제적 요인 종합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출산행위도 ‘주어진 조건 하에서의 합리적 선택
의 결과’이다. 즉, 아이를 가지는 행위도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주어진 조건’은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남성의 소득, 여성의 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여성의 실
업률, 여성의 임금(소득) 등이며,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실업률, 고용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도 포함될 수 있
다. 또한 유럽, 한국, 일본 등 실증분석 사례 국가의 공통적인 경제적
요인으로 자녀양육비용(사교육비 포함)⁵⁾ 부담 정도, 고용 및 소득의 안
정성으로 인한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
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 등에 관한 정책도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될 수 있다.

5) 자녀의 양과 질의 상충관계(trade-off)를 고려하여 자녀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저출산은
자녀의 질적 증가를 위한 교육비 증가를, 교육비의 증가는 자녀양육비용 증가로 인한 자
녀 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는 저출산의 원인
이자 결과일 수 있다.

외국사례의 시사점으로 거시적 경제상황이나 고용수준의 변동이 여성 개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반응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율이 경기변동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큰 경제적 충격과 연동하여 변동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사회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경기변동 등의 충격이 출산율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되며, 그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은 출산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임금상승과 취업기회 확대는 출산의 기회비용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출산·보육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지표로서는 교육비(사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성 임금의 증가율, 남녀 간 임금 격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은 정부의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의 강도를 반영하는 요인들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위기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출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청년실업 증가와 비정규직 증가, 중장년층의 명예퇴직 증가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는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 외국사례에서 통일 후 경제적 불안이 심화된 동독지역이나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험한 폴란드에서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동독지역과 폴란드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폭으로 여성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연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비슷한 결과가 초래되었다.⁶⁾ 즉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청년층 실업률(고용률), 비정규직 비중, 평

6) 실제로 한국 국민은 선진국 국민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과 고용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ILO 경제안정지표(Economic Security Index)에서 한국은 세계 32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ILO, 2004; 최숙희·김정우,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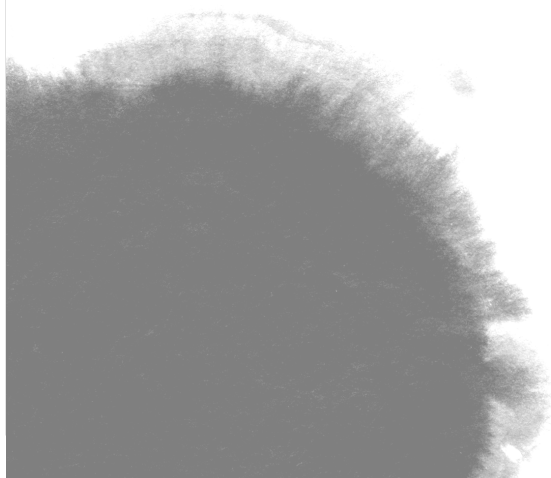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균 퇴직 연령 등은 출산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국내 실증분석 사례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남녀 대학졸업자 모두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다음해의 혼인을 크게 높였고, 소비자 물가가 높았을 때 혼인율을 낮추었다(이삼식 외, 2007). 즉, 당해 연도와 1년 전의 경기 상황이 남녀의 혼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편, 경제변수들의 영향력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의 효과는 남성에게는 무의미 했지만, 여성에게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1년 뒤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출산을 변화는 경기와 연동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 및 미래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은 출산력 결정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요인들로 간주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에는 출산율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두 변수 간의 반전된 관계는 일-가정양립 정도의 매개에 의한 것이다. 즉 과거에 일-가정양립 정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을 기피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최근에 올수록 일-가정이 양립되면서 오히려 여성 경제활동 참가가 가구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요컨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일-가정양립 정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되고 있다.

05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제5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출산력의 변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총체적인 요인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선진국에서 경험한 것과 동일한 공통된 요인도 있고, 한국 사회에 특수한 요인도 있다고 생각된다. 출산력은 전 세계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동에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원인을 해결한다고 해서 출산력 변화 추세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서 논의하였지만, 출산력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현상 일단은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경제적인 요인에 반해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보다 근본적이고 배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문화적 요인이 출산력 변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요인처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힘들다. 출산력의 변동은 장기적인 사회변동의 하나이고,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장기적인 사회변동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연구를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요인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사회 변화, 압축적 근대성, 성인기로의 이행, 성역할 분담 등이다. 이들 영역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 출산력 변화와 관련하여 서구 등 다른 사회와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보다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제1 절 사회 변화와 출산

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은 출산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미 이에 관한 수많은 해답이 제시되어 왔다.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론적 해답은 일찍이 사회과학자인 필립 아리에스에 의해 제시되었다(Aries, 1964; 1980).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어린이(child)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전근대사회에서 어린이는 작은 성인으로 인식되었다. 오늘날처럼 성인과 어린이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린이는 성인과는 다른 존재이고, 영유아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어린이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린이를 보는 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린이는 성인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고 확산되고, 어린이는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인의 보호와 손길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어린이는 비로소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생각되지 않고, 애정과 기쁨이라는 비경제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전에는 각 가족의 관점에서는 어린이도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노동력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린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소득의 원천이 아니라 소비의 원천이 되었다. 어린이에게는 경제적 실리를 기대할 수 없고 대신 정서적인 만족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가 아니고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각 가족은 자녀의 수를 줄이게 되었다.

부부 당 자녀수가 감소하고, 자녀에 대한 가족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어린이는 부모 위에 왕처럼 군림하게 되었다. 가족생활의 중심이 자녀의 만족과 행복을 최대한 증진하는데 맞추어지게 되었다. 부부의 생활은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부부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로부터 얻는 기쁨이 가족의 행복이 되었다.

자녀에게 가족자원의 많은 부분을 투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왕처럼 군림하는 상황에서 부부에게 많은 자녀는 필요 없었고, 한 명, 두 명 혹은 세 명 정도의 소규모 자녀도 충분했다. 근대사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높은 출산력에서 낮은 출산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20세기 후반에 진행된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력은 또 한 번의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되었다. 가족사학자들은 가족 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왕같이 군림하던 시대에서 가족의 생활이 부부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되었다고 본다(Aries, 1980). 서구사회에서 개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결혼도 각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이해되었다. 만약 결혼생활에서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얻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더 이상 결혼은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자녀의 존재와 자녀의 이해보다 결혼을 하는 남성과 여성 각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가족생활에서 무게의 중심이 자녀에서 부부 혹은 각 개인으로 옮겨지면서 어린이는 더 이상 부모에게 왕처럼 군림할 수 없게 되었고, 부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자녀의 수는 더 줄어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한 사회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각 가족은 자녀의 수를 줄이게 되었는지, 사회적인 차원에서 왜 출산력이 낮아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면서 근본적인 이론적 논의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구체적인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출산력 변동을 설명하는데 모두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서구사회를 관찰하면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출산력 변동을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출산력의 변동은 외국의 선진 사회와도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출산력 변화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

하는데 이러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호주의 인구학자인 피터 맥도날드는 저출산에서 어떻게 국가가 개입할 것인지,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다루면서 저출산의 배경으로서 현대의 사회변동을 이끈 주요한 두 가지 이론을 소개하였다(McDonald, 2006). 피터 맥도날드는 주로 20세기 후반에 서구 선진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논의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의 첫 번째 논의는 20세기 후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변동의 흐름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틀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자본주의의 발달을 둘러싸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재화가 생산, 분배된다는 고전적 경제이론과 시장은 완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의 완전한 균형 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을 어느 정도 규율, 통제해야 한다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일정 정도 용인하고 강조하는 케인즈학과 경제이론이 경쟁을 해왔다. 그 결과 완전히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긴 자본주의 사회는 찾기 어렵고, 정부의 규제가 부문에 따라 실시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경제조직과 기구가 완전한 자유와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가장 효율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가 적극적으로 옹호되고 글로벌 수준에서 세력을 넓혔다. “신경제”라고도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는 모든 종류의 규율을 철폐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경제주체의 자유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구조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주체인 기업가와 고용주의 자유와 자율성을 더 신장시켰다. 그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주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고, 임금 및 각종 복지를 책임지는 정규직보다는 필요한 노동력만 활용하고 언제든지 그만두게 만들 수 있는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노동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가질 수 없고, 언제든지 고용주의 입장에 따라 직장에 들어갔다가 나가야 하는 소위 유연한 노동시장에 적응해야만 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무직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분야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는 감소해갔다. 경제구조는 체리리프킨이 오래 전에 논의한대로 노동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리프킨, 1996). 그런데 존재하는 일자리도 안정성이 매우 낮은 일자리로 바뀌고 있다.

이런 신경제 상황에서 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신규 일자리의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된 현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일자리를 찾는데 점점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일자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매우 불안정하면서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런 일자리를 찾는 데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인턴 등 여러 경험을 쌓느라 교육기간이 길어지는데,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찾는 처음 일자리는 대부분 평생 지속할 수 없는 임시직 수준의 일자리이다.

맥도날드도 신경제 혹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가 결혼 및 재생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혹은 재구조화라고 지적한다(McDonald, 2006: 491). 선진국에서 시작된 신경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한국의 경우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됨

에 따라 저출산의 깊은 골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 세계적인 사회변동의 주요한 두 번째 흐름은 맥도날드의 표현에 의하면 성찰적 근대화이다. 이미 기든스 등에 의해 주창된 성찰적 근대화(Beck, Giddens and Lash, 1994)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근대화된다는 소위 근대화론을 넘어서 정치학자인 잉글하트가 주창한 문화변동(Inglehart and Welzel, 2005), 반 드 카가 주창한 제2의 인구학적 변천(van de Kaa, 1987) 등과 맥락을 같이 하는 가치 변동을 뜻한다.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각 개인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와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한다. 즉, 주어진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생각을 주장하고 표출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게 된다. 사회에 동조하는 개인이 아니라 언제나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성찰적 개인 혹은 성찰적 행위자를 중시하게 된다.

성찰적 근대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전통사회나 근대사회와는 다른 가치체계나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 가치변동 혹은 문화변동이 일어나고, 과거부터 전승되어 온 가치체계는 전복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가치변동은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고, 세계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근본적인 가치의 변동이고 문화의 변동이다.

이를 저출산에 연결시키면 남녀가 꼭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는가, 가족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출산은 꼭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가, 자녀는 꼭 필요한 것인가 등등 과거에 당연히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비단 가족에 관한 가족가치관만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최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결핍으로부터의 해방,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등 모든 제약과 통제, 결핍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화적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원리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혹은 구조조정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피터 맥도날드가 지적한 사회변동의 첫 번째 흐름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관찰되고 있고, 이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나 맥도날드가 지적한 사회변동의 두 번째 흐름인 social liberalism 혹은 성찰적 근대화의 진전은 한국 사회에서 서구 선진국가가 경험한 것만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유교로 상징되는 전통사회의 영향이 매우 크고, 21세기 최첨단의 가치관이 발달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개인의 내면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생각한다. 서구의 인구학자들은 한국에서도 반 드 카와 레스테게가 주장한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Lesthaeghe, Ron, 2010), 겉으로는 유사한 변화가 일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이 보여도 한국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유교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는 남성중심의 전통적 가족을 모형으로 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피터 맥도날드는 오늘날 서구 선진국가 및 아시아의 후발 근대국가들에서 관찰되는 글로벌한 사회변동의 대표적인 두 가지 흐름을 소개하였다. 저출산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신자유주의경제는 현재 한국 사회를 비롯한 선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을 지적하는 셈이다. 다른 한편 가치변동 혹은 문화변동으로 일컬을 수 있는 성찰적

근대화는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말할 수 있다. 피터 맥도날드의 주장 중 첫 번째 원인인 신자유주의적 경제라는 경제적 요인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고 한국의 저출산을 설명할 때도 타당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찰적 근대화가 한국 사회의 저출산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제2절 압축적 근대성과 출산

현대 한국을 비롯한 후발 근대국가의 근대화 혹은 근대성을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되는 이론의 하나는 장경섭의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이론이다(장경섭, 2009). 한국의 경제성장을 두고 압축적 경제성장, 압축적 근대화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다. 그런데 장경섭은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단순히 매우 응축된 형태의 경제발전, 경제성장을 일컫는 개념이 아니고,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사회 혹은 심지어는 근대화가 맨 처음 이루어진 유럽의 다양한 근대화를 설명할 때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압축적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론적 작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압축적 근대성의 특징은 근대성은 각 사회가 처한 맥락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를 시작한 한국 사회의 근대성은 일본의 근대성과도 다르고 대만의 근대성과도 다르다. 비록 동아시아 사회의 근대성을 압축적 근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각 사회가 근대사회의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다고 해도, 각 사회에서 관찰되는 근대성은 각 사회가 지나온 맥락에 따른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출산력 변동과 연관한 압축적 근대성의 설명방식은 한국의 근대화는 국가가 가족에게 재생산의 모든 부담을 지우고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영역만 국가의 영역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출산, 양육 등의 모든 것은 개인 혹은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 매우 타당한 면을 지닌다. 맥락이 다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근대화 이전 및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는 계가 성행했다. 반지계, 가구계, 친목계 등도 있지만, 일반 국민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계를 만들어 운영했었다. 그러나 계는 계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만 중간에 이탈해도 전체가 와해되기 쉬운, 매우 위험도(risk)가 큰 신용 금융이었다. 왜 일반 국민들이 이처럼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계를 통해 목돈을 만들고 돈을 융통했을까. 국가는 산업화와 함께 수출국가를 지향하면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저축을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은 국가가 통제하면서 철저히 수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낮은 이율로 몰아주었다. 일반 국민이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정부는 개별 가족경제는 철저히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개별 가계가 제도금융권을 통해 자본을 융통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 혹은 개별 가족은 제도금융권에서 배제된 채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해야 했다.

이는 가족 및 출산과 연관시켜도 마찬가지이다. 대가족 및 자녀가 많을수록 근대화 및 산업화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국가는 근대화 및 산업화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출산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개인의 몸이라는 매우 사적인 영역에 국민적 합의나 개인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구피임, 인공중절수술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철저히 각 개인 및 가족의 몫으로 돌리고 국가는 개입하지 않았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역군이 남성 노동

자가 재생산을 위해 지친 노동력을 회복해야 할 때도 개별 가족에게 책임을 맡기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았다.

한국의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국가, 가족, 개인의 관계는 서구 사회가 근대화를 이루면서 나타난 근대성과는 거리가 멀다. 결혼과 출산, 양육의 모든 의무와 책임이 개인과 가족으로 귀착되는 근대성은 바로 한국, 좀 더 확대하면 동아시아, 이를 더 확대하면 유럽에서도 남부유럽 등에서 경험하고 있는 근대성이고, 이는 근대화를 시작한 서유럽에서 관찰되는 근대성과는 다른 근대성인 것이다.

이런 압축적 근대성이 나타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개별 가족이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극히 위험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출산, 양육 등 자녀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은 가족에 있다는 압축적 근대성 아래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에 노출된 개별 가족이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 되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녀를 한 명이라도 갖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위험을 안고 가는 셈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는 것도 단순히 이혼이라는 리스크 이상의 매우 큰 리스크로 인식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더 큰 리스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매우 낮은 출산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높은 주거비, 실업률 등등의 경제적 요인 및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의 변화 등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압축적 근대성이라는 보다 적합성이 있는 이론적인 논의에 기반 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절 성인기로의 이행과 출산

한국사회에서 출산은 결혼을 전제로 시작된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혼인을 하는 연령층으로 기대되는 젊은이들 가운데 미혼율이 높다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결혼을 늦추거나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어렵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서 직장을 얻는다 할지라도 안정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직장이라기보다는 매우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성격이 강한 직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젊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남성 가계부양자 가족모형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란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신이 새로 형성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관문으로 받아들인다. 젊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통해 자신이 자라온 가족을 떠나 배우자의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각자 자신의 부모나 가족에게 의존적이었던 젊은이들이 결혼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기존의 가족망이 확대되는 것이고 특히 여성은 배우자인 시댁의 가족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시댁 가족성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

성역할의 측면에서 남성은 여전히 가계부양자 역할이 부여되고 여성은 가사와 가족성원을 돌보는 역할이 부여되지만, 현실은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기대되고, 결혼 전에 일하던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하기를 원한다.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현재의 직장을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한 명의 임금으로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집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라 가족을 돌보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이중의 역할이 기대된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실제로 많은 여성이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일터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노동조건 아래 일하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알려져 있는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일단 일자리를 찾게 되면 노동강도가 강하고 장시간 노동의 현실에 노출된다. 젊은 남성과 여성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새로 얻는 일자리에서 “생존”하는 것이 절대적인 명제가 되는 현실에 직면한다. 결혼, 출산은 2순위이고, 1순위는 새로 얻은 직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직위로 상승하여 안정된 직장환경을 얻는 것이 된다.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은 젊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를 갖추는 것이지만,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그 다음 단계의 이행을 이루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결혼을 통해 성인기로 이행하는데 직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살 곳을 마련하는 것 또한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다. 전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는 젊은 남성과 여성이 자신이 일해서 번 돈만으로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독특한 주거문화 속에서 부모세대의 경제적, 재정적 지원 없이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주거비용을 감당하면서 결혼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혼 및 가족생활은 매우 값비싼 소비재가 되고 있다. 직장, 주택 등 이미 풍요로운 시대를 거쳐 성장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의 수준이 높아진 젊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

의 조건을 갖추는 것조차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풍요로운 사회(affluent society)는 살아가면서 지녀야할게 많은 사회이다. 과거에는 각 가정에서 지니는 가구가 단출했지만, 오늘날에는 좁은 방, 좁은 집에서도 침대를 포함한 각종 가구는 꼭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사 및 여가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전자제품도 꼭 갖추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한국사회는 훨씬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고, 이런 풍요로운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녀야할게 너무 많다.

다른 한편 우리는 소비사회에 살고 있다. 소비사회는 최소한 지출해야 할 게 많은 사회다. 과거에는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안 쓰고 절약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물론 오늘날에도 검약하는 생활을 한다. 그렇지만 소비사회가 전개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소비해야 하는 품목과 액수는 나날이 증가한다. 결혼을 하면서 드는 비용도 소비사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든다. 결혼 후 자녀를 낳아 기를 때에도 과거에는 양육에 별로 중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비싼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많아진 사회에 살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젊은 남성과 여성은 결혼으로 이행하기 쉽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보 등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성중심의 사회, 부계중심의 가족, “풍요”로운 소비사회에서 최소한 “남들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회심리적 부담,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드는 최소한 경제적 부담 등 한국인의 젊은이가 결혼 전에 결혼과 그 이후의 가족생활을 생각하면서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성인기로의 이행은 결혼만이 아니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까지 포함한

다. 한국인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 자녀에 대해 매우 먼 미래까지 생각하며 자녀를 출산한다. 서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조사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는 자녀와 함께 주고받는 정서적 만족감,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등을 꼽는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일상생활에서 맛보는 희로애락을 기대하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평등”한 사회에서 내 자녀만은 남들보다 더 잘 나고,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녀가 마음껏 뛰어 놀고, 자녀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공부를 잘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느낀다. 자신의 자녀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무한 책임과 고통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결혼 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자녀의 세속적 성공과 안전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전투에 돌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부모들은 출산을 할 때 자신이 출산한 자녀의 5년, 10년, 15년 후에 자신들이 자녀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계산하지 않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출산한 자녀의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미리 생각하고, 자녀를 위해 어떻게,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지 예측하면서 출산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은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성은 합리성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계산적인 합리성일 뿐이다. 자녀를 출산하는데 한국인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먼 미래의 비용까지 계산하고 출산하는 독특한 국민이 되어 있다.

제4절 성역할 분담과 출산

우리는 이 연구에서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문화적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에 포함되는 요인도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치관의 영역이 있다. 보통 결혼, 출산 등을 포함하는 가치관은 가족가치관이라고 불리운다. 한 사회의 가족가치관은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성, 사랑, 결혼, 출산 등에 관한 가치를 나타내며 이러한 가치는 실질적인 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가족가치관과 가족에 관한 행위가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때로는 단순한 관계(association)에 머무를 수도 있고, 때로는 인과관계(causal relation)를 이룰 수도 있으며, 또 때로는 인과관계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를 나타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나 출산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는 흔히 가치관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결혼이나 출산을 결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경우 실제로 가치관과 결혼이나 출산 사이에는 관계가 있지만,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과관계는 연구자가 그렇게 설정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한 검증을 통해 이론이 성립되고, 그 이론에 근거해서 다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국 상황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에 관한 가족가치관과 실제 결혼이나 출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가 먼저 일어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가치관이 변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관계의 방향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결혼이나 출산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결혼이나 출산에 관한

“태도”를 원인 혹은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결혼 및 출산에 연관된 많은 행태를 결과 혹은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행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결혼에 관한 태도나 의향을 물어보는 조사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귀하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찬성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졌다고 가정하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해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점차 부정적으로 답했을 수도 있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결혼, 출산 등에 관한 가족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소위 가치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향은 근본적인 가치관변동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가치관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 자체가 결혼에 대한 가치나 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혼이나 출산에 연관된 여러 사회상황이 매우 어렵게 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결혼은 하고 싶지만, 실제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가족생활의 어려움이 인지될 때, 이런 상황에서 꼭 결혼을 해서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관한 회의적인 태도가 반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태도의 결과나 출산에 대한 태도의 결과는 그 자체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삶의 질이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

다른 한 예로 성역할에 관한 가치를 생각해보자. 2006년 동아시아사회조사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의 가족가치관 문항을 분석해 보면 한국인의 가족가치관은 매우 전통적

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 이혼, 동거 등의 여러 가족가치관 항목에서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유독 성역할에 관한 태도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태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즉, 남자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는 집안과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남자나 여자 모두 할 수 있으면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6년보다 이전에 조사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역할에 관한 태도가 어느 시점이나 계기를 기점으로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한 편으로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계기, 즉 한국 사회의 경우 1997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가계경제가 어려워지고, 남성부양자 가족모형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족부양자로서의 남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생존을 위해서는 여성도 일할 수 있는 한 일을 해서 가족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태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남녀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태도가 바뀌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즉,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일을 할 수 있는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반면에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가사노동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태도로 바뀐 것인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가치나 태도와 행위 사이의 간극이 클 때는 가치 및 태도와 행위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매우 어렵다. 예로 한국인의 가족가치관을 조사해보면 전반적으로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혼이나 동거에 대한 태도 조사는 한국인의 이혼이나 동거에 대한 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이혼율이 매우 높고, 공식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동거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보면 겉으로 표현되는 가치나 태도와 실제 행위 사이에 간극이 큼을 알 수 있다. 가치 및 태도와 행위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 등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가치 및 태도와 행위 사이에 가능한 한 간극이 적거나 없어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가족에 관한 가치나 태도와 행위 사이에 여전히 간극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논의는 저출산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요인 가운데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를 저출산의 원인이나 결과로 상정하기 매우 어려움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 가운데 하나인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고, 이 자체가 저출산을 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요인이라고 상정하지는 않는다.

가족가치관 가운데 출산 및 양육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가치관은 성역할이다. 한국사회에서 성역할에 관한 가치 혹은 태도는 다른 가족가치관과 달리 탈전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회와 비교해서도 한국인의 성역할은 적어도 태도 면에서는 가장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비록 한국사회에 남성부양자 가족모형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지만 지난 10여년 사이에 한국인이 경험한 여러 형태의 경제위기는 더 이상 남성부양자 가족모형이 절대적이거나 유효한 모형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여러 조사를 통해 한국인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각각 집 밖과 집 안으로 규정했던 “전통적”인 성역할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을 적어도 태도의 면에서는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의 상황에서 성역할에 관한 태도가 변했다고 해서 실제 행위도 동일하게 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가치나 태도가 행위를 결정짓는 원인이나 독립변수로 작용한다면 성역할에 관한 태도의 변화는 실제 가족 내 성역할의 행위의 면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성은 유급노동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이를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유급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과거 아내의 역할이었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집안일로 역할이 규정되었던 여성의 경우 집 바깥에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시간은 줄여 총 노동시간의 균형을 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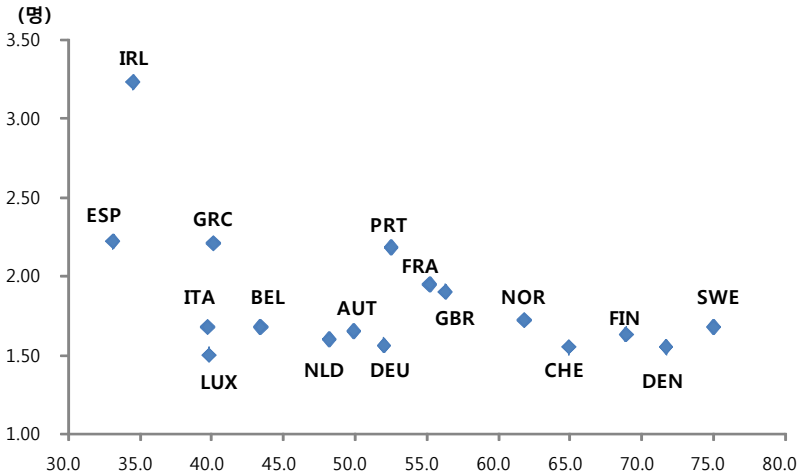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심각한 출산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는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증가하는데 반해, 남성들은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즉, 성역할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가고 있고 일하는 여성은 증가하여 남성과 여성의 역할 공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결혼한 여성 특히 일하는 결혼한 여성에게 과부하가 걸리고 이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한국사회의 출산력 변동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한다고 저출산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가 변한 것은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해서 된 것만은 아니다.

예로 198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합계출산율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았다. 이 당시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여성이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했다. 그래서 서구사회에서도 일하는 여성에 대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가 별로 없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 현재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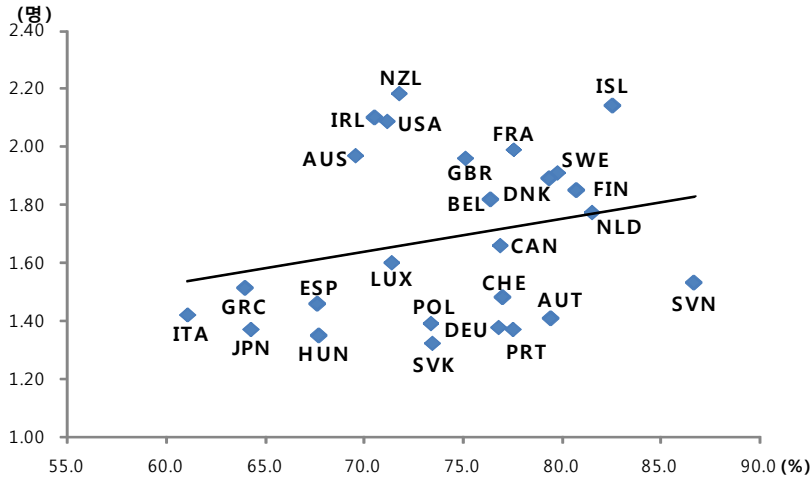
[그림 5-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 1980



주 : 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5-64세 여성 중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
2)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
3) 이하 알파벳 순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U(독일), DNK(덴마크),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GRC(그리스), HUN(헝가리), ISL(아이슬란드), ITA(이탈리아), IRL(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VN(슬로베니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국제노동기구(ILO) 각년도 노동시장 자료; OECD 각년도 자료

[그림 5-2] OECD국가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합계출산율, 2008



주: 이하 알파벳 순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U(독일), DNK(덴마크),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GRC(그리스), HUN(헝가리), ISL(아이슬란드), ITA(이탈리아), IRL(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VN(슬로베니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그러나 2008년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은 사회에서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사회에서 출산율도 낮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높고 출산율도 높은 사회에서 여성이 갑자기 슈퍼우먼이 된 것이 아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사회에서 여성들이 집 바깥에서 유급노동(market labor)도 하지 않고 자녀출산도 회피하는 이기적인 여성이 된 것도 아니다. 여성이 더 이상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여성의 역할을 집 안으로 한정하는 성역할에 변화가 생기고,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하면서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에 나선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도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동시에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있게 된 것이다. 반면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해도 이러한

변화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여전이 여성의 몫이라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에 나서지 않았고, 그 결과 일하고 싶은 여성도 결혼 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녀출산과 양육이 모두 여성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자녀출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결국 사회적인 차원에서 저출산을 맞게 된 것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증가해왔다. 그러나 유럽 각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결코 높지 않다. 2008년 현재 이태리보다는 높지만 그리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합계출산율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유럽의 어느 국가에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태리나 그리스에 비교해 보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해왔지만, 유럽과 비교해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아직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리고 출산율은 어느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이런 결과를 두고 한국 여성들은 집 밖에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자녀 출산도 기피하는 이기적인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0여년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과의 관계를 하나의 보편적인 모습의 변화로 본다면, 한국 사회는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여성 및 개별 가족에게 지우고 있는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낮고 출산율도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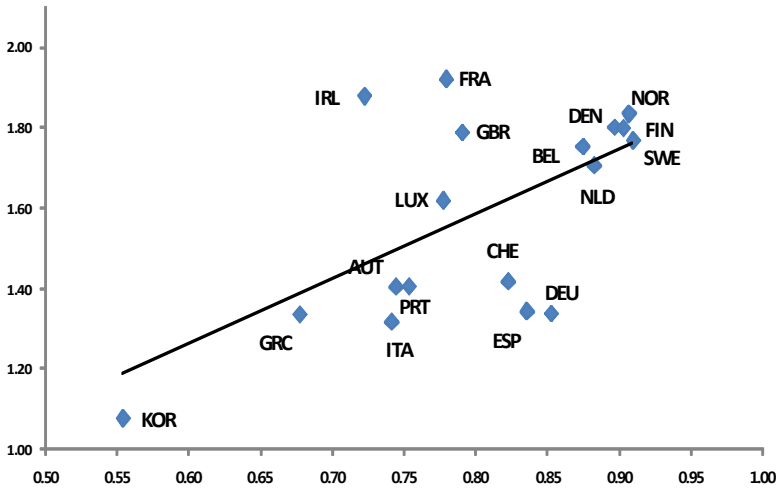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비단 일하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화에만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5-3]은 성평등지수,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여성권한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여성권한지수의 측면에서도 유럽에서 이 지수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남유럽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남성중심적인 사회로 알려져 있고,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사회적인 차원의 제도화 수준이 가장 낮은 남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한국 여성의 권한지수는 훨씬 낮은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한국 여성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화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여성은 남유럽의 여성과 비교해서도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초래한 사회문화적 영역에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사회, 성불평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성과 가족의 책임, 전통적인 성역할관념과 실천 등이 존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국가는 동아시아의 국가나 유럽의 경우 남유럽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성중심적인 사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남성이 여전히 가족부양자가 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고 한국 가족의 모형이 남성부양자 가족모형으로 되어 있는 한, 남성들은 결혼을 하면 거의 전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남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일단 주 가족부양자는 당연히 남자이어야 하고, 여자는 일을 하더라도 부 가족부양자라고 생각한다. 여자가 일을 할 때 남자가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결혼한 여성이 일을 하는 경우 주 가족부양자인 남성을 넘어서 자신이 주 가족부양자로서 일을 한다는 의식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성역할에 관한 관념이 바뀌어 여성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 한다는

태도가 점차 많아져도 일단 주 가족부양자는 언제나 남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5-3] 성평등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2005



주 : 1) 성평등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의회 내 여성 의원 및 공적·사적 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 여성 전문직 및 고급 기술직 비율,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 등으로 구성됨.

2) 이하 알파벳 순 AUT(오스트리아), BEL(벨기에), CAN(캐나다), CHE(스위스), CZE(체코), DEU(독일), DNK(덴마크), ESP(스페인), FIN(핀란드), FRA(프랑스), GBR(영국), GRC(그리스), HUN(헝가리), ISL(아이슬란드), ITA(이탈리아), IRL(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OR(노르웨이),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르투갈), SVK(슬로바키아), SVN(슬로베니아), SWE(스웨덴), USA(미국)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그런데 현재의 지식정보사회 경제구조 아래에서는 남성의 부양 능력이 과거와는 다르게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더 이상 평생고용은 존재하지도 않고, 설혹 노동시장에 안착을 했어도 언제 노동시장에서 퇴출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의 경제능력과 비교를 해보아도 남성의 경제능력이 여성의 경제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약해지고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의 교육수준과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적인 능력 또한 남성의 경제능력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가족의 주

부양책임은 남자에게 기대되고 있다. 남성이 가족의 주 부양자로 인식되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오히려 남성은 괴롭고 힘든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일한 교육을 받더라도 여전히 남녀 간 소득격차가 존재한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무언의 사퇴압력을 받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 및 육아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일자리에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 등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 및 육아 휴가 등을 제대로 쓸 수 있을 뿐, 일반 회사에 다니며 일하는 여성들은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다. 더 이상 여성이 일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이 결혼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여성의 커리어는 남성의 커리어와 거의 동등하게 대접받지 못한다. 심지어는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회사 내에서 감원을 해야 하는 경우,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떠나 결혼한 여성으로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고려대상이 되고, 남편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일하는 남편을 둔 여성은 감원의 일차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의 커리어는 남성의 커리어에 종속되어 있다.

여성들이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온 가사노동, 돌봄노동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집안일은 아직도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면 여성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경제적인 소득을 많이 올릴지라도, 심지어는 남성보다 경제적인 기여도가 더 높더라도 오히려 “여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doin gender)” 강박관념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 돌봄노동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총 노동시간은 남성의 총 노동시간을 상회하게 된다. 심지어는 남성이 유급노동을 못하고 대신 여성이 유급노동을 하여 가계를 이끌어가게 되어도 남성에게 가사노동을 맡기지 못하고 여성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여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전통적 젠더 상에 사로잡혀 심지어는 가사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끼며 무급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은 서구처럼 가족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화의 발현, 그에 따른 가치관의 급격한 변동이라기보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변동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모형은 적합성을 잃고 있는데, 한국 사회, 한국인의 관념과 행위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이고, 남성을 주부양자로 설정하는 가족모형이 여전히 “정상적”인 가족모형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모형은 여성의 지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 직업, 라이프스타일 등 모든 면에서 현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사회변동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변화에 비해 남성의 변화 및 사회제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 가운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지점이 가족 내 무급가사노동, 돌봄노동의 영역이라고 본다.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경제적 요인이라는 직접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면에 사회문화적 요인은 저출산을 낳고 있는 배경요인인면서 좀 더 거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남성중심적 사회, 남성 주부양자 가족 모형으로 표현되는 성불평등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가임연령층의 부부의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 돌봄노동이 어떻게 전개되

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밝히고자 한다.

한국인의 유급노동, 무급가사노동, 돌봄노동,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 등의 생활시간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 등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유급노동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개인의 자유시간은 증가한다는 것이 사회 및 개인의 삶의 양식의 변화에 관한 대표적인 견해이다. 또한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무급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등 무급노동은 세탁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한국과 같은 경우 전기밥솥 등 여성이 담당해 온 가사노동을 대체해주는 가전제품이 개발, 보급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또한 서구사회의 경우 집에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인스턴트 식품을 사서 데워먹거나 집 밖에서 식사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가사노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반면에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녀의 질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면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여 나온 결과들이다.

그러면 부부의 생활시간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부부간의 성역할에 변화가 생기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여성은 무급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게 된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여성의 역할이 집 안에서 가사노동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남성이 굳이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성의 성역할분업에도 변화가 요구되었다. 남성들은 유급노동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도 여성과 평등하게 나누어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현실에 남성들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느리다. 서구의 경우에도 많은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에 비하면 남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매우 적다. 서구사회에서도 가사노동에 관련한 아직도 “혁명”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더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저출산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성역할분업에 관한 관념과 이를 실천하는 행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 내 성평등의 실현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 과연 한국사회에서는 가족 내에서 얼마나 성역할분업의 측면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인의 생활시간 분석을 위해 통계청이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의 조사 이전에도 KBS가 미디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전 국민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부터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조사의 규모나 대표성 등의 면에서 한국인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9년부터 매 5년 간격으로 실시되어 온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가 더 낫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개인과 부부의 생활시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개인의 생활시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학생이 아닌 남녀로 한정하여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다. 둘째, 부부의 생활시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학생이 아니면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여성의 연령이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가구의 부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의 변화에 따라 한 가구의 총 가사노동시간에서 여성이 분담하고 있는 비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범위를 좁혔다.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령층에 접근하기 위해서 부부들만을 골라 부인의 연령이 20~49세로 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령층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생활시간분석에서 생활시간은 크게 네 영역, 즉 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자유시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유급노동은 하루 24시간 중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했다고 기록한 경우이면, 무급노동은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을 포함한다. 개인유지는 수면, 씻기, 먹기 등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뜻하고 자유시간은 우리가 흔히 여가라고 표현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표 5-1>은 20세부터 64세까지 평일에 개인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수준에서 평일에 유급노동시간은 지난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1999년부터 2004년, 2009년까지 유급노동시간이 473분에서 464분, 464분으로 변하고 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유급노동시간이 1999년에 273분에서 2004년에 264분으로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266분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1999년과 2009년만을 연결하여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남성과 여성 모두 유급노동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무급노동시간은 지난 10년간 남성의 경우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1999년에 37분에서 2004년에 37분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2009년에는 41분으로 4분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에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1999년에 273분에서 2004년에 255분, 2009년에는 251분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의 증가가 4분에 그친 반면,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22분이 감소하여 무급노동시간에서 여성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두고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적어도 세 시점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보면 방향의 면에서 증가하는 방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0년 사이에 평일에 하루 평균 4분의 증가를 두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무급노동을 무급가사노동과 무급돌봄노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지난 10년간 무급가사노동과 무급돌봄노동 모두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비록 시간의 증가량은 1~4분 내외 이지만 증감의 방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무급가사노동은 일정하게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돌봄노동은 일관성 있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왔다. 한국사회에서도 서구사회처럼 여성의 가사노동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육아, 자녀교육, 혹은 노인돌보기 등을 포함하는 돌봄노동에 드는 시간은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 모두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분야는 개인유지분야이다. 수면, 씻기, 밥먹기 등을 포함하는 개인유지 분야에 하루 24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일관성이 있으면서 유의미하게 증가해 온 활동은 바로 이 개인유지시간이다. 남성의 경우 1999년에 평일에 개인유지활동에 쓴 시간이 614분이었는데, 2009년에는 639분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1999년에 605분을 개인유지활동에 썼었는데, 2009년에는 636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10년 사이에 평균 30분 정도 개인유지활동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있다.

유급노동이 증가하고 여가가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이지만, 한국인의 평일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 1999년에 평일 여가시간은 하루에 316분이었다. 그런데 2004년에는 315분으로 변하고 2009년에는 295분으로 5년 사이에

20분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1999년에는 여가시간이 하루에 289분이었는데, 2004년에는 304분으로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는 다시 288분으로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주5일 근무제, 2008년의 경제 위기 등은 유급노동, 무급노동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도 변화시킨 요소일 것이다. 어쨌든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여가시간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1〉 20~64세 개인의 생활시간 변화, 평일

(단위: %)

	1999		2004		2009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유급노동	473.3	272.7	464.1	264.2	464.3	266.4
무급노동	36.8	273.2	36.9	254.5	41.4	250.5
가사노동	24.4	211.0	23.8	190.7	27.6	183.1
돌봄노동	12.4	62.2	13.1	63.9	13.8	67.3
개인유지	614.1	605.0	623.9	617.4	639.4	635.5
여가	315.8	289.1	315.0	303.9	294.8	287.6
합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자료: 각년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이번에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부의 생활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 당시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부인의 연령이 20세에서 64세까지인 부부만을 골라 생활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표 5-2). 그 결과 기혼유배우 남성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유급노동은 1999년에 481분에서 477분으로 4분 감소하였고,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변화가 없었다. 기혼유배우 여성의 경우에는 1999년에 유급노동시간이 241분에서 2004년에 229분으로 12분 감소하였는데 2009년에는 233분으로 5년 사이에 약 4분 정도 다시 증가하였다. 그래도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 사이의 변화로 보면 기혼유배우 여성의 유급노동시

간도 241분에서 233분으로 약 8분간 감소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기혼유배우 남성과 여성 모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평일의 유급노동시간은 감소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무급노동의 경우 기혼유배우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지난 10년간 약 4분 정도 증가하였다. 공교롭게도 유급노동시간이 하루 4분 감소하였는데, 무급노동시간은 약 4분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무급노동의 추세를 보면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약간 감소하는 듯이 보일 정도로 기혼유배우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에 변화가 없었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5년 동안 무급노동시간이 약 4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기혼유배우 여성의 경우 무급노동시간이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 319분에서 300분으로 약 19분 감소하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5년동안 300분에서 296분으로 다시 약 4분간 감소하였다. 그래서 기혼유배우 여성의 경우 무급가사노동에 드는 시간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무급노동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나누어보면, 기혼유배우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10년 사이에 모두 약간씩 증가해왔다. 비록 증가량이 크지 않고, 또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10년간을 비교하면 증가하는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기혼유배우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들이는 시간이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혼유배우 여성의 경우에는 개인수준에서 드러났던 것과 동일하게 가사노동시간은 일관성 있게 감소해왔다. 반면에 돌봄노동시간은 일관성 있게 증가해왔다. 비록 돌봄노동시간의 증가량이 1999년에서 2004년 사이에 4분,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5분으로 작다면 작은 시간량이겠지만,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녀에게 들이는 시간의 양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고령부모를 부양하는 일차적인 책임도 기

혼여성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돌봄노동에 들어는 시간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혼유배우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도 개인유지시간은 지난 10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기혼유배우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 10년 사이에 개인유지시간이 25~30분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여가시간의 변화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기혼유배우 남성의 경우 1999년부터 2004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평일 여가시간은 계속 감소해왔다.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약 5분정도 여가시간이 감소했는데,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여가시간이 거의 20분정도 감소하였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주로 주말에 여가가 집중되고 평일에는 여가시간이 감소하는 현상이 이런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다. 아직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평일에 기혼유배우 남성의 여가시간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추세가 약간 다르다. 기혼유배우 여성의 여가시간은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18분 정도 증가하는데,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오히려 17분 정도 감소한다. 그래서 기혼유배우 여성의 경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0년간 여가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기혼유배우 남성과 여성의 경우 지난 10년간 수면, 씻기, 밥 먹기 등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인유지활동에 들인 시간은 증가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여가시간은 감소했다. 혹은 큰 증가가 없었다. 대신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은 남성과 여성에게 약간 다른 유형을 보이며 변화해왔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남성의 무급노동 참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무급노동에 참여한 시간의 양은 매우 적었다는 점이다.

〈표 5-2〉 부부의 생활시간 변화, 평일

(단위: %)

	1999		2004		2009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유급노동	481.0	241.1	476.6	229.1	476.8	233.1
무급노동	38.3	318.6	37.9	300.5	42.5	295.6
가사노동	24.2	243.7	23.0	221.8	25.9	211.2
돌봄노동	14.1	74.8	14.9	78.7	16.7	84.4
개인유지	615.9	598.4	625.6	610.2	640.1	627.9
여가	304.7	281.9	299.8	300.2	280.5	283.3
합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주 : 부인의 연령이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 : 각년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남성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가계부양자 역할을 하며, 여성은 전업주부로 집에 남아 가족을 돌보는 성역할분업에서는 남성의 무급노동 참여가 쉽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 성역할분업이 지속되는데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저출산과 관련해서 성역할분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들의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하는 여성이 있는 가족 내에서는 남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가사노동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현실적 의미와 성평등이 가족 내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한국사회에서 과연 여성이 일을 하면, 그리고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남편은 여성도 유급노동을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집에서 가사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그래서 일하는 여성이 집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을까? 남편은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조절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인 기혼유배우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서는 여성의 유급노동시간과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기혼

부부가 가사노동을 둘러싸고 어떻게 분담하는지에 관해 몇 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있고, 이 이론에 따라 한국에서는 어떤 이론이 성별 가사노동분업을 잘 설명하는지 검증한 연구도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은기수, 2009). 그러나 이 분석은 이론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남성과 여성의 무급노동의 동향을 바탕으로 일하는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남성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해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의 가사노동분담이라는 미완의 혁명이 진행 중인지 판단해보려고 한다.

이 작업을 위해서 일반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종속변수는 하루 24시간 중 기혼유배우 남성과 여성이 수행하는 무급노동 시간의 합을 분모로 하고, 여성의 무급노동 시간을 분자로 하는, 가구당 총 가사노동 가운데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다. 통제변수로는 남편과 부인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남편의 유급노동시간과 부인의 유급노동시간이다. 기혼유배우 여성의 가구 내 무급노동 분담의 탄력성이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급노동시간을 하루에 유급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유급노동이 4시간미만, 4시간 이상 8시간미만, 8시간 이상 등 네 구간으로 범주화하였다. 그 다음 4시간 이상 8시간미만을 준거범주로 삼고 상호작용항을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시켰다.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 확대되면서 평일과 주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토요일도 평일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주5일 근무제가 도입·확대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평일에는 여가 등을 줄이면서 유급노동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남성과 여성과 함께 무

급노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저출산의 사회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임연령층인 20~49세 사이의 여성이 아내인 부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5-3>은 1999년, 2009년 평일 기준으로 기혼유배우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가사노동분담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3>에 나타난 개개의 변수의 회귀계수의 의미를 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가구내 무급노동 분담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 <표 5-4>에서 1999년과 2009년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율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표 5-4>에서 준거집단은 부부 가운데 남편과 아내 모두 조사 당일인 평일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을 한 경우이다. <표 5-4>에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전혀 유급노동을 안 한 경우, 4시간 미만 유급노동을 한 경우,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한 경우는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유급노동을 했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다(그러나 실제로는 이 범주 내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유급노동 시간은 다른 경우가 많을 것이다).

〈표 5-3〉 부인의 무급노동 분담률에 관한 회귀분석, 평일 기준

변수	1999		2009	
	b	p값	b	p값
상수항	24.803	<.0001	27.278	<.0001
연령				
남편 연령	0.039	0.1987	-0.129	0.0052
부인 연령	-0.215	<.0001	-0.157	0.0015
남편 교육수준				
중학이하의 학력	-1.383	<.0001	-0.082	0.8918
고등학교 학력(준거)				
전문대 및 대학 학력	0.114	0.6759	0.059	0.8657
대학원 석사 이상	-1.007	0.115	-0.247	0.7293
부인 교육수준				
중학이하의 학력	-0.192	0.5029	-1.170	0.0403
고등학교 학력(준거)				
전문대 및 대학 학력	-0.069	0.8303	0.540	0.1391
대학원 석사 이상	-0.260	0.8331	0.752	0.4914
남편 유급노동 시간				
전혀 일하지 않음	-0.244	0.8121	-1.704	0.2358
4시간 미만	0.448	0.6953	-0.461	0.8059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준거)				
8시간 이상	0.552	0.349	0.801	0.3182
부인 유급노동 시간				
전혀 일하지 않음	11.276	<.0001	13.829	<.0001
4시간 미만	8.806	<.0001	7.599	<.0001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준거)				
8시간 이상	-7.099	<.0001	-5.023	<.0001
유급 노동시간 조합				
남편=0h and 부인=0h	-1.416	0.2308	0.392	0.8196
남편=0h and 0h<부인<4h	-2.853	0.1155	1.108	0.7462
남편=0h and 8h<=부인	-1.058	0.419	-0.021	0.9915
0h<남편<4h and 부인=0h	-0.836	0.5437	1.964	0.3922
0h<남편<4h and 0h<부인<4h	-0.086	0.9589	2.237	0.497
0h<남편<4h and 8h<=부인	-0.383	0.7977	1.089	0.6748
8h<=남편 and 부인=0h	1.558	0.0311	0.723	0.4616
8h<=남편 and 0h<부인<4h	0.244	0.7986	0.212	0.8978
8h<=남편 and 8h<=부인	-0.412	0.62	-1.744	0.1296
N	9719		4098	
F	393.57	<.0001	206.86	<.0001
R square	0.4829		0.5387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시간동안 유급노동을 하더라도 유급노동 시간량에 따라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달라진다(표 5-4). 준거범주보다 남편과 아내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줄어들면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증가하고, 준거범주보다 남편과 아내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크면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감소한다. 1999년 평일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남편과 아내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유급노동을 했을 때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 보다 9.6% 더 높다. 반면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했을 때의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준거범주의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 보다 7% 적다. 남편과 아내의 유급노동시간량에 차이가 있을 때 아내의 무급노동분담률은 어떻게 변화할까. 상식적으로 남편의 유급노동시간량이 아내의 유급노동시간량보다 점점 더 커지면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아내의 유급노동시간량이 남편보다 더 많으면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감소할 것이다.

<표 5-4>는 일단 이런 상식적인 추론이 맞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유급노동을 하지 않은 반면 남편은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한 경우,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준거범주보다 13.4% 더 크다. 아내는 유급노동을 하지 않고 남편은 4시간 이상 8시간미만 유급노동을 한 경우,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준거범주보다 11.3% 포인트 더 높다. 다른 한편, 남편은 유급노동을 하지 않고 아내가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하면, 준거범주에 비해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이 8.4% 포인트 적다. 또 남편은 4시간미만 유급노동을 하고 아내는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한 경우, 준거범주보다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7% 포인트 작다.

1999년 평일에 남편과 아내의 유급노동 시간량에 따른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의 변화는 일단 상식적인 추론에 맞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아내의 유급노동 시간량의 변화보다 남편

의 유급노동 시간량의 변화에 더 크게 반응한다. 아내의 유급노동 시간이 증가할 때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이 감소하는 양의 절대값은 남편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증가할 때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이 증가하는 양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런 결과는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이 아내의 유급노동 시간량보다도 남편의 유급노동 시간량에 의해 더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2009년 평일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2009년에도 남편과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동일하다고 간주한 범주에서 남편과 아내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감소할수록 준거범주에 비해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이 증가한다. 남편과 아내 모두 유급노동량이 0인 범주에서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은 준거범주의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보다 12.5% 포인트 더 높다. 남편과 아내 모두 4시간 미만의 유급노동을 한 경우에는 준거범주보다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이 9.4% 포인트 더 높다. 반면에 남편과 아내 모두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한 경우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 준거범주의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보다 6% 포인트 적다.

다른 한편, 남편이 아내보다 더 유급노동을 많이 하고 남편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은 계속 증가한다. 남편이 8시간 이상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아내는 전혀 유급노동을 하지 않은 경우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은 준거범주의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보다 15% 포인트 더 높다. 그런데 아내가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한다고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이 체계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남편과 아내가 모두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 아내의 무급노동 부담률이 12.5% 포인트인데, 남편이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내의 무급노동분담율은 15.3% 포인트, 13.8% 포인트, 15.3% 포인트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내가 4시간 미만 유급노동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편, 아내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남편의 유급노동 시간량보다 더 많으면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감소한다. 남편은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신 아내가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했을 때,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준거범주 아내의 무급노동분담률보다 6.7% 포인트 작다. 그런데 아내가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하고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0부터 8시간 이상으로 증가할 때, 각 범주의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준거범주의 여성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4〉 부부의 유급노동시간별 부인의 무급노동 분담률의 변화, 평일 기준

		남편 유급노동시간				(% 변화)
		일하지 않음	4시간 미만	4-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부인 유급노동시간						
1999						
일하지 않음	9.6	10.9	11.3	13.4		
4시간 미만	5.7	9.2	8.8	9.6		
4-8시간미만	-0.2	0.4	준거집단	0.6		
8시간 이상	-8.4	-7.0	-7.1	-7.0		
2009						
일하지 않음	12.5	15.3	13.8	15.3		
4시간 미만	7.0	9.4	7.6	8.6		
4-8시간미만	-1.7	-0.5	준거집단	0.8		
8시간 이상	-6.7	-4.4	-5.0	-6.0		

2009년 평일 남편과 아내의 무급노동 참여 현상은 1999년 평일 현상과 비슷하다. 그러나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아치형태로 나타난다. 2009년에는 1999년보다 남편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늘수록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더 높아진다. 반대로 아내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늘수록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감소폭도 적고, 그 감소폭은 1999년보다 2009년에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 변화의 탄력성이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 때는 1999년보다 2009년에 아내에게 불리한 쪽으로 즉,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이 더 크게

증가한다. 반면에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 때에는 1999년보다 2009년의 아내의 무급노동 분담률의 감소량이 더 줄어든다. 이는 유급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을 포함하는 무급노동 참여 시간은 매우 작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하는 여성의 증가하는 유급노동시간에 상응하여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무급노동을 분담하는 수준으로는 증가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1999년과 2009년의 평일에 부부의 무급노동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매우 실망스런 현상이다. 개인적인 수준과 부부수준에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면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이 비록 작은 양이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 가사 노동은 꾸준히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나, 돌봄노동은 그보다는 적지만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주말에는 기혼유배우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률에 어떤 현상과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표 5-5>는 1999년과 2009년 주말 기준 기혼유배우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에 따라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회귀분석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6>은 <표 5-5>의 회귀분석 결과에 기반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유급노동을 한 경우를 준거범주로 삼아 다른 범주에 속한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률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5-5〉 부인의 무급노동 분담률에 관한 회귀분석, 주말 기준

변수	1999		2009	
	b	p값	b	p값
상수항	23.609	<.0001	22.203	<.0001
연령				
남편 연령	-0.035	0.3724	-0.139	0.019
부인 연령	-0.146	0.0008	-0.059	0.3583
남편 교육수준				
중학이하의 학력	-0.633	0.096	-0.889	0.2733
고등학교 학력(준거)				
전문대 및 대학 학력	0.590	0.0981	0.232	0.6107
대학원 석사 이상	0.344	0.6663	-0.773	0.4083
부인교육수준				
중학이하의 학력	-0.454	0.2274	-1.245	0.1179
고등학교 학력(준거)				
전문대 및 대학 학력	-1.357	0.0015	0.739	0.1181
대학원 석사 이상	0.007	0.9967	3.069	0.0346
남편 유급노동시간				
전혀 일하지 않음	-1.951	0.1037	0.629	0.7055
4시간 미만	1.189	0.3768	0.927	0.6573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준거)				
8시간 이상	2.006	0.0118	1.414	0.3095
부인 유급노동시간				
전혀 일하지 않음	11.838	<.0001	13.218	<.0001
4시간 미만	7.652	<.0001	8.313	<.0001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준거)				
8시간 이상	-5.467	<.0001	-4.799	0.005
유급노동시간 조합				
남편=0h and 부인=0h	-2.815	0.0286	-4.664	0.0089
남편=0h and 0h<부인<4h	-0.273	0.8724	-0.361	0.8877
남편=0h and 8h<=부인	0.368	0.8196	-2.760	0.2518
0h<남편<4h and 부인=0h	-3.934	0.009	-3.891	0.086
0h<남편<4h and 0h<부인<4h	-2.999	0.0959	-2.539	0.3847
0h<남편<4h and 8h<=부인	-1.703	0.3747	0.021	0.9949
8h<=남편 and 부인=0h	-0.587	0.5251	-0.615	0.6948
8h<=남편 and 0h<부인<4h	0.843	0.5082	1.198	0.6187
8h<=남편 and 8h<=부인	-2.050	0.0819	-2.115	0.3065
N	6,289		2,842	
F	145.17	<.0001	56.82	<.0001
R square	0.3477		0.3168	

<표 5-6>에 나타난 1999년 주말의 여성의 무급노동 부담률의 현황은 평일과 비교하여 별 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같다고 가정한, 대각선상에 놓인 범주에 속한 여성의 무급노동 부담률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 시간량이 감소할수록 여성의 무급노동 부담률은 증가한다. 반대로 남성과 여성 모두 8시간 이상 일한 경우, 준거범주인 남성과 여성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일한 경우보다 여성의 무급노동 부담률이 5.5% 포인트 작다.

다른 한편,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여성의 무급노동 부담률은 높아진다. 1999년 주말에 기혼유배우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유급노동을 하지 않은 경우, 가구 전체의 무급노동 중에서 여성의 무급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유급노동을 한 경우에 비교할 때 7% 포인트 높다. 여성은 유급 노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여성의 무급노동분담률은 9%→12%→13% 포인트로 계속 높아진다. 여성이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하고 남성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여성의 무급노동분담률은 준거범주의 여성에 비해 7% 포인트만 감소한다. 여성이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하고 주말에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0~4시간 미만, 4~8시간 미만, 8시간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면 여성의 무급노동분담률은 6%→5.5%→5.5%로 감소한다. 이는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지만,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무급노동의 양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번에는 2009년 주말에는 기혼유배우 여성의 무급노동 부담률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1999년과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4~8시간 미만인 경우를 준거범주로 삼고, 남성과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을 범주화하여 여성의 무급노동분담률을 살펴본다.

여성이 전혀 유급노동을 하지 않고 남편도 유급노동을 하지 않았을 때, 준거범주의 여성에 비해 무급노동 분담률은 9.2% 포인트 높았다. 남편이 유급노동을 하고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무급노동 분담률은 10.3% 포인트에서 14% 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이러한 수치는 1999년의 평일수치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반면, 아내가 8시간 이상 유급노동을 하고 남편은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거범주에 비해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7% 포인트가 적었다. 남편도 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준거범주에 비해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률은 5.5% 포인트 적었다.

이처럼 주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 유급노동을 한 경우 준거범주에 비해 무급노동분담률은 평일에 비해 절대값이 더 적었다. 주중에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못한 남성이 주말에 가사노동 참여를 늘린다면 주말에 여성이 일을 하건 하지 않건 무급노동분담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남성이 유급노동을 해서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률이 정(+)의 값을 가져도 그 절대값은 적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여성의 무급노동 분담률의 부(-)의 절대값이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1999년과 비교하면 2009년에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내가 일을 하건 혹은 하지 않건 간에, 무급가사노동, 무급돌봄노동 등을 두고 성별 분업이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외에 근본적이고 배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결정요인으로 남성중심적 사회, 성불평등성이 지적되는데, 특히 성역할분업과 관련된 태도는 일견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성역할 분업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좀 더 평등한 방향으로 성역할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결론에 이르고 있다.

〈표 5-6〉 부부의 유급노동시간별 부인의 무급노동 분담률의 변화, 주말

(% 변화)

	남편 유급노동시간			
	일하지 않음	4시간미만	4~8시간미만	8시간 이상
부인 유급노동시간				
1999				
일하지 않음	7.1	9.1	11.8	13.3
4시간 미만	5.4	5.8	7.7	10.5
4~8시간미만	-2.0	1.2	준거집단	2.0
8시간 이상	-7.1	-6.0	-5.5	-5.5
2009				
일하지 않음	9.2	10.3	13.2	14.0
4시간 미만	8.6	6.7	8.3	10.9
4~8시간미만	0.6	0.9	준거집단	1.4
8시간 이상	-6.9	-3.9	-4.8	-5.5

제5절 사회문화적 요인 종합

이 장은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의 결정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을 탐색했다. 현재 한국의 저출산에는 경제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으로의 이행, 출산으로의 이행에 미치는 여러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에 미치는 경제적 요인이 매우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다루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제적 요인에 관해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문화적 요인에 집중했다. 사회문화적 요인은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요인이면서 배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밝히더라도, 사회문화적 조건을 변화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경제적인 요인의 변화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저출산문제가 외국의 다른 사회와 뭔가 다른 독특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요인은 한국 사회나 다른 선진 외국 사회나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결혼에 대한 관념, 자녀에 대한 관념과 기대, 여전히 부계중심적인 가족구조, 여성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남성중심적인 사회는 저출산을 낳고 있는 사회문화적 결정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가운데 가치관변동을 포함한 문화변동은 저출산의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미 호주의 인구학자 피터 맥도날드는 오늘날 전 세계의 사회변동의 두 가지 큰 흐름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로 성찰적 근대화라는 용어도 문화변동, 가치관변동을 지적했다. 이는 로날드 잉글하트의 가치변동이론, 인구학자인 반 드 카 및 레스테게 등의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이론에서 강조하는 가치변동과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 최근 레스테게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도 서구 사회가 경험한 제2의 인구학적 변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여 한국에서도 그러한 가치변동 및 행위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면상 결혼이 늦어지고 이혼이 증가하며 혼전 성관계가 증가하고 미혼 남녀 사이에 동거 혹은 따로 살면서 실제의 생활은 함께 영위하는 삶의 양식의 증가 등이 서구 사회가 경험한 가족가치관의 변동, 행위의 변동을 한국사회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사회에서는 서구가 경험한 개인주의화에 바탕을 둔 후기근대사회적인 가치관의 변동, 문화변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피상적인 태도 혹은 가치는 많이 변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가족의 이해가 반영되고 가족의 결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결혼, 사랑과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때로는 연애와 결혼이 분리되고 감정보다는 조건을 중시하는 결혼 등은 서구사회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결혼이다. 그러면서 결혼 및 가족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이 형성·유지되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먼저

여성의 지위 향상에서 출발한다. 젊은 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의 교육 수준만큼 높다. 젊은 여성은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자신의 일을 하길 원한다. 반면에 남성의 경제적 능력은 과거보다 약화되고 있고, 동년배 여성과 비교해 특별히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남녀가 “평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가족모형은 남성 가계부양자 가족모형이다. 그런데 남성 가계부양자 가족모형에서도 여성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 혹은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한 편으로는 일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유급노동을 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가족을 돌보고 가사를 전담하는 전통적 성역할뿐만 아니라 일을 해서 경제적 소득도 올리는 새로운 역할 또한 부과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놀랍게 변하고 있는데, 한국 여성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 중심의 가족망에 포함된다. 여성은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사회에 살면서 결혼과 동시에 부계중심의 가족구조에 들어간다. 여성의 변화에 비해 남성의 변화는 매우 느리고, 여성에게 전통적인 성역할과 함께 일을 해서 돈도 벌어야 하는 새로운 역할이 부과되지만,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에 머물러 있다. 여성이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부과된 이중의 부담, 즉 일과 가정을 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가족의 차원에서는 가사노동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족 내에서 먼저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부계 및 남성 중심의 가족이 변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이윽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결혼·출산 등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출산과 양육이 공적인 영역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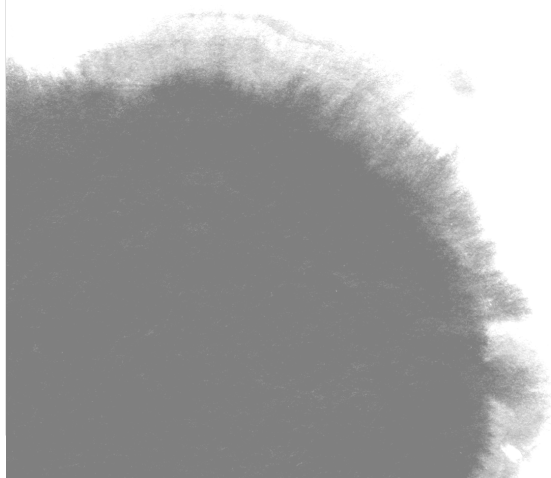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요인의 하나인 가사노동분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노동시간도 증가하면서 과연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기혼유배우 남성과 여성이 가사노동을 분업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여성이 유급노동을 하는 만큼 남성도 무급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여성의 유급노동 증가에 따라 남성도 무급노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사이에 가사노동분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인다. 아무리 국가가 나서서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비를 지원한들 가족 내에서 부부 사이에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둘러싸고 여성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출산의 해법은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되고 출산과 자녀 양육에 관한 객관적인 조건은 개선된다 할지라도 여성의 사회적 대우가 향상되지 않고, 여성들도 일하도록 강요받으면서 동시에 가족 내에서 무급노동 또한 여성이 전담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여성의 입장에서 자녀의 출산은 행복임과 동시에 더 큰 어려움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흔히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하여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지, 출산에 대한 태도가 약화되었다든지 하는 가치관변동이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전제하에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도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출산에 관한 국내외의 여러 대표적인 연구에서 결혼·출산 등에 관한 몇 문항의 응답을 결혼·출산을 포함하는 가족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로 해석하고 가치관의 변동이 일어나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 피터 맥도날드가 꼽고 있

는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또는 성찰적 근대화가 지난 수십 년간 서구사회에서 진행되면서 가치관 변동, 문화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우리는 이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경섭 교수가 주장하는 압축성 근대성이 한국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압축적 근대성 아래 한국 사회는 결혼과 출산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면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이지,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치관이 서구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 결혼과 출산에 관한 조사에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한다면 이는 가치관의 변동이 아니라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삶의 질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시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결혼 및 출산 등에 관한 가치관의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고, 그 보다 더 근원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 즉 여전히 남성중심적이고, 부계중심적인 가족구조, 가족내 및 사회에서 여전한 성불평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등이 향상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기대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저출산은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06

출산율 예측모형 개발





제6장 출산율 예측 모형

제1 절 분석방법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출산율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패널분석방법(panel analysis)을 적용하고자 한다. 패널분석방법이란 분석대상 자료를 횡단면적 자료 혹은 종단면적 자료를 사용하는 대신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패널데이터는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를 합쳐 놓은 것으로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조사한 것이다(민인식·최필선, 2010). 패널분석방법은 종속변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요인 즉,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최충익, 2008). 후술하겠지만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된다.

패널분석방법은 몇 가지 장점을 갖는다(최충익, 2008).

첫째, 패널분석방법은 개별적 특이성(individual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다. 개별적인 특이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시계열분석이나 횡단면분석은 왜곡된 결과를 얻을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패널분석은 시계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에서는 불가능한 개별특성효과(individual effect)와 시간특성효과(time effect)를 모두 통제할 수 있다.

둘째, 패널분석방법은 연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자유도(degree of

freedom)와 가변성(variability)을 제공해주어 분석을 용이하게 해준다.

셋째, 패널분석방법은 조정의 동태성(dynamics of adjustment)을 가능하게 해준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횡단면 분포에서는 포착하기 힘든 다양한 변화를 포착하게 도와준다.

넷째, 패널분석방법은 순수한 횡단면분석이나 순수한 시계열분석에서 포착하기 힘든 효과를 보다 잘 측정해낼 수 있다.

다섯째, 패널분석방법은 횡단면분석이나 시계열분석에 비해서 복잡한 행태적 모형을 구축 및 검증하게 해준다.

여섯째, 패널분석방법은 개인, 기업, 정부 등과 같이 미시적인 단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편이(bias)를 통제하게 해준다. 이것은 두 번째의 개별특성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개별 데이터 셋(set)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편이들을 제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

패널분석방법의 단점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0).

첫째, 데이터 수집상의 어려움이다.

둘째, 각 국가나 지역을 패널 그룹(한 국가나 지역 단위의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여러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를 의미)으로 설정하여 조사한 데이터의 경우 패널 그룹 간 상관관계(group-wise correlation)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룹 간 상관관계를 모형추정에서 고려해야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셋째, 개인이 패널 그룹인 경우 시간변수의 길이가 짧다. 추정량에 대한 점근적 추론(asymptotic inference)은 패널의 숫자가 커지는 것에 의존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가를 패널그룹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패널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특정한 변수가 지역(국가)마다 잠재해 있고, 시계열별 독특한 특성이 매 기간에

잠재해 있음을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지역(국가)마다 시간마다 모두 고정되지 않고 확률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0).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패널 선형 회귀모형을 아래와 같이 가정한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quad \dots \cdot (1)$$

$$i = 1, 2, \dots, n \text{ 및 } t = 1, 2, \dots, T$$

고정효과모형은 식 (1)에서의 오차항 u_i 를 확률변수(random variable)가 아니라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로 간주한다. 식 (1)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_{it} = (\alpha + u_i) + \beta x_{it} + e_{it} \quad \dots \cdot (2)$$

고정효과모형은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fixed) 있다고 가정한다. 즉, 기울기 모수인 β 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서로 동일하지만, 상수항($\alpha + u_i$)은 패널 개체별로 달라진다. 고정효과모형은 개인마다 개별특성효과를 구분하여 계수를 추정한다는 데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별특성효과를 반영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자유도를 소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독립변수들에 대한 계수값 추정이 상대적으로 정확성을 잃을 수 있다(민인식·최필선, 2010).

확률효과모형은 식 (2)의 상수항($\alpha + u_i$)을 확률변수로 가정한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확률효과모형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처럼 더미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계수값 추정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위험은 적지만 다소 엄격한 가정이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개별특성 효과가 독립변수와 전혀 관계를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민인식·최필선, 2010).

이 중 어느 모형을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에는 시간불변의 개별특성효과가 독립변수들과 관련이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간불변의 개별특성효과가 독립변수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고, 시간불변의 개별특성효과가 독립변수들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한다(Johnston, 1997:403; 최충익, 2008에서 재인용). 그러나 확률효과모형이 유효한 경우라도 고정효과모형에 의해 산출된 계수 값은 여전히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es)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개 시간불변의 특정 요소가 독립변수들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을 경우 확률효과모형보다 고정효과모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Johnston, 1997:403; 최충익, 2008에서 재인용). 두 모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택기준이 요구되는데, 두 모형 중 어느 것이 더욱 적합한지를 하우스만 검정(Hausman Specification Test)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용할 모형에 선택할 것이다.

제2절 분석대상 및 변수

1. 패널그룹(국가)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예측모형으로서 장·단점들을 고려하여 패널분석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널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냐이다. 앞서 출산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 사회의 출산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은 한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시기 상 다소의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서구의 선진국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경제적 요인 대부분은 한국과 선진국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는 것들로 간주할 수 있다. 인구학적 및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국가나 사회마다 각자의 오랜 역사를 거쳐 형성되어 온 것으로 한국과 서구 선진국가들과 공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내지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과거 유럽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거나 적어도 최근까지 일부 유럽 국가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공유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혼화나 동거, 만산화, 양성평등의식 등은 과거부터 유럽 선진국가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성분업적 역할관도 현재 한국 사회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과거에 유럽 선진국가에서도 그리고 최근까지 남부유럽 등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문화이다. 반면, 혼외출산 등은 유럽 선진국들 사이에 보편화 추세에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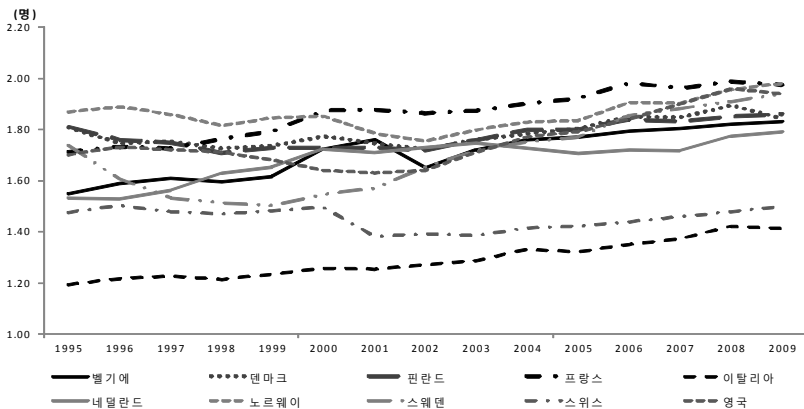
요컨대, 한국 사회의 출산력 예측에는 한국 사회가 고유하게 경험한 요인들과 함께 서구 선진국들이 이미 경험하였거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출산력 예측방법으로서 패널분석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 국가들의 인구학적,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출산율 예측을 위한 패널분석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패널그룹 즉 국가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모형은 이미

제2차 인구학적 변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출산율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출산율이 오래 전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졌으며, 일정한 수준에 저점을 이룬 후 증가하거나 다소 불규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국가(패널그룹)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미래의 한국 출산율을 예측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현재의 한국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사회발전이 이루어진 국가(패널그룹)로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회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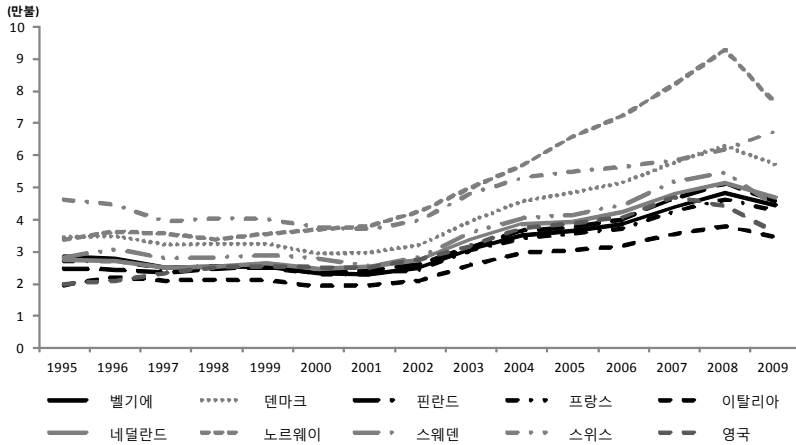
이에 따라 모형 개발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대상 국가들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OECD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오랜 전에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졌으나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출산율이 반등세로 전환되었으며,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상회하였다 점에서 선정된 것이다. 분석대상 각국의 패널데이터 구축기간은 1995~2009년으로 총 15년이다.

[그림 6-1] 모형 개발을 위한 분석대상국가의 출산율, 1995~2009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그림 6-2] 모형개발을 위한 분석대상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1995~2009



자료 : 통계청 KOSIS

한편, 한국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였으며, 여전히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1990~2009년 기간 동안 주요 인구학적,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조혼인율과 초산연령만이 선진국들과 어느 정도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율과 강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 아직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의 관계로 전환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척도로서 양성평등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는 선진국과 달리 출산율과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산 등과 관련한 정도를 나타내는 가족지출비율 등도 오히려 출산율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 출산율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조차 한국 사회에서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장기간 출산율이 지속적 이면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 일종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패널그룹으로 선정하지 못했다.

〈표 6-1〉 한국에서 각 요인과 출산율 간의 관계

	상관계수	분석대상 기간
혼외출산율	-.507*	1990-2009
초산연령	-.923***	1993-2009
영아사망률	.894**	1993-2009
조혼인율	.942***	1990-2009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88***	1990-2009
1인당 GNI	-.755***	1990-2009
GDI	-.917***	1993-2009
GEM	-.851	1993-2009
여성 대학진학	-.944***	1990-2009
GDP대비 보건정책지출 비율	-.845***	1990-2009
GDP대비 가족정책지출 비율	-.694***	1990-2007

2.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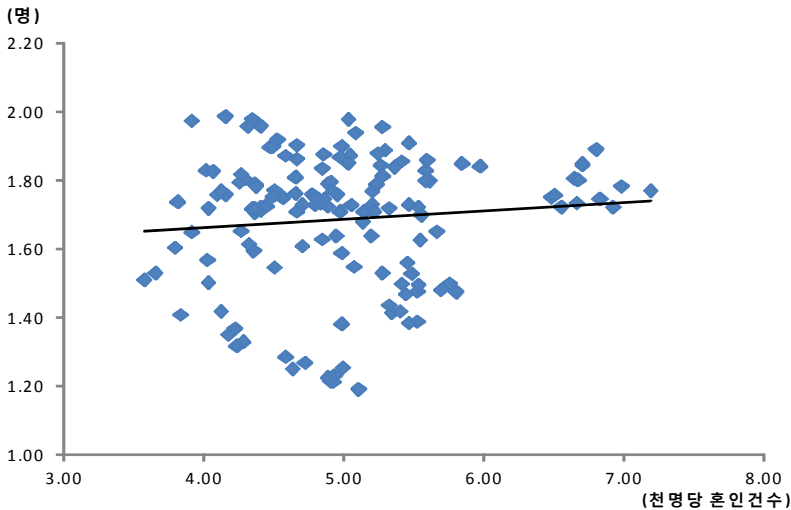
가. 인구학적 요인

제3장에서 논의된 출산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출산가능인구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임기인구 규모 및 구조, 혼인율, 혼외출산비율을, 그리고 출산가능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초혼연령, 초산연령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녀수 크기나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사망률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가임기 여성인구 규모는 출생이수와 정적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가임기 여성인구 규모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가임여성인구의 증가율과 출생이수 증가율에 따라 정적 혹은 부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가임여성인구의 연령구조 즉, 핵심가임여성(25~34세)의 비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가임여성인구는 출산율과 사회경제적 발전 등과 연동하여 일정하게 변동하기보다 그 자체적인 특성에 의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므로 본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는 법률적으로 결혼을 하여야만 출산을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 법률혼 외적인 출산의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법률혼에서 발생하는 출산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출산율 예측을 위해서는 혼인율의 지표가 반드시 모형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형에는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로 측정되는 조혼인율을 포함하도록 한다. 분석대상 국가들의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을 도식화한 [그림 6-3]에서 보면, 이들 간의 상관성은 아주 약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두 변인 간의 단순 도식화가 아닌 다변량 분석모형에서 초혼연령비율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 간 상관성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림 6-3]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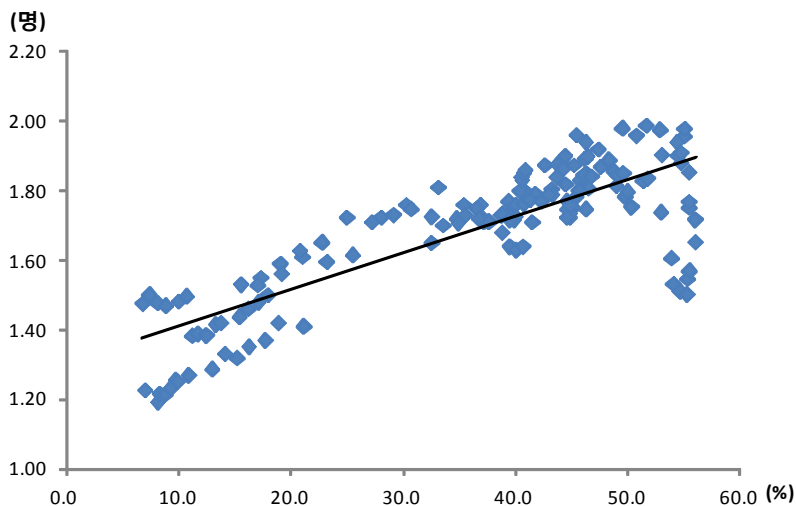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istics

앞서 혼외출산비율은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만 보아도 전체 출산율과 강한 정적 관계를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혼외출산비율은 단순히 인구학적 변수이기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 정도

를 나타내는 척도로도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외출산비율은 모형에 포함하여 향후 출산을 예측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모형 구축을 위한 분석대상 국가들의 혼외출산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도시화해 보면, 비교적 강한 상관성을 나타낸다.

[그림 6-4] 혼외출산비율과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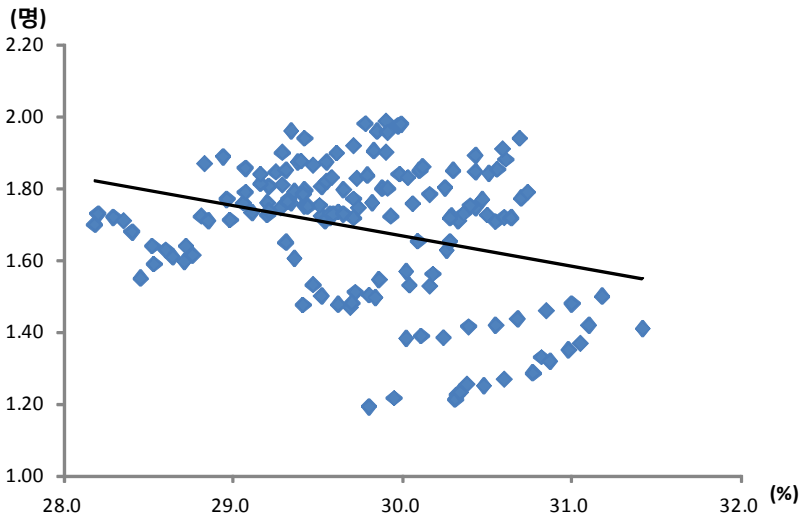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istics

초혼연령이나 초산연령 모두 사회적으로 혹은 생리적으로 출산시작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임기간 단축, 불임증, 늦어진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실제 출산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만혼화와 이에 따른 만산화가 출산율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초혼연령과 초산연령 모두 출산율 예측모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초혼연령의 경우 분석대상 국가에서 해당 자료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더욱이 (초혼 후 첫째아 출산 간의 기간이 일정한 경우) 초산연

령과 다소 중복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본 모형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모형 구축을 위한 분석대상 국가들의 혼외출산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도시화해 보면, 비록 상관성 정도는 낮으나 대체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분석모형에서 초혼연령비율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초산연령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성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6-5] 초산연령과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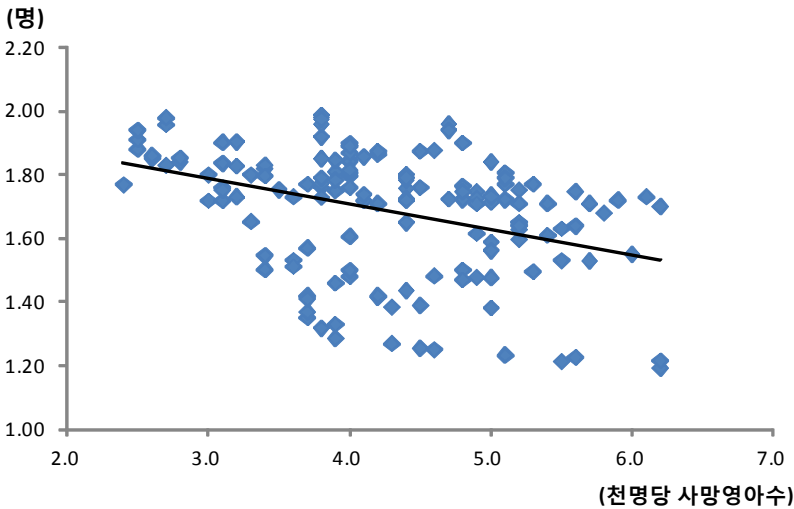


자료 : OECD Statistics

오래 전부터 영아사망률은 자녀수와 아주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기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에 대한 확신감이 낮아 예비로 추가적인 출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영아사망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기 출산자녀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원하는 자녀의 수를 달성하면 단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아사망률은 본 모형에 포함하도록 한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분석대상 국가들의 영아사망률 합계출산

율의 시계열 자료를 도시화해 보면, 비록 상관성 정도는 낮으나 대체적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분석모형에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영아사망률은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성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6-6] 영아사망률과 합계출산율



자료 : OECD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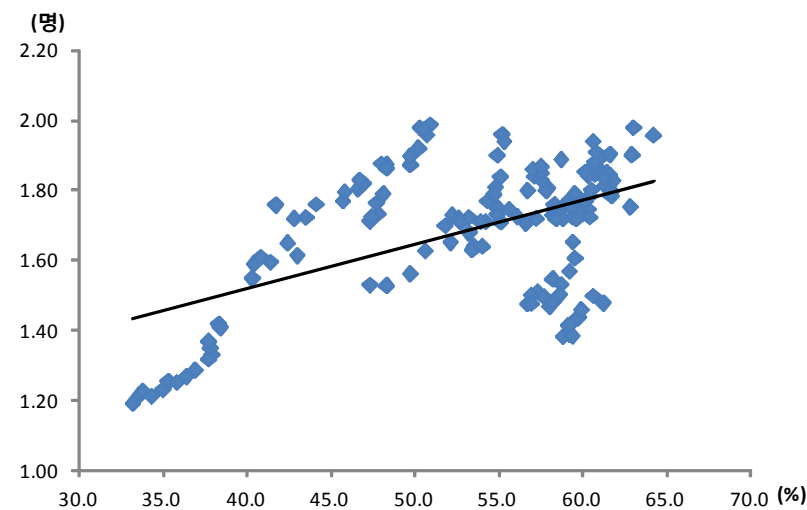
나. 경제적 요인

제4장에서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들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한 경제적 요인으로서는 여성 노동시장 참가, 경기 변동(혹은 경제 위기), 실업률, 임금수준, 가구소득, 소비자 물가지수, 자녀양육비용 또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주는 정책까지 포함된다. 이들 경제적 요인 모두를 모형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요인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변동이나 실업률은 여성경제

활동참가율이나 임금수준 및 가구소득과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경기변동과 연관성이 높다. 임금수준과 가구소득 역시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양육비용과 이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정책은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은 다른 요인과 출산력에 미치는 중복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진 요인으로 최종 선정한다. 그러한 경제적 요인으로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기변동, 실업률 등 대표), 일인당 국민소득(임금, 소득 등 대표), GDP 대비 가족정책 및 보건정책 지출 비율(정책 대표)이 포함된다.

이들 네 가지 경제적 요인 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과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인 25~34세로 한정한다. 모형에서 고려한 분석대상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도식화한 결과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관성은 모형에서 일가정양립 관련 요인들이 통제될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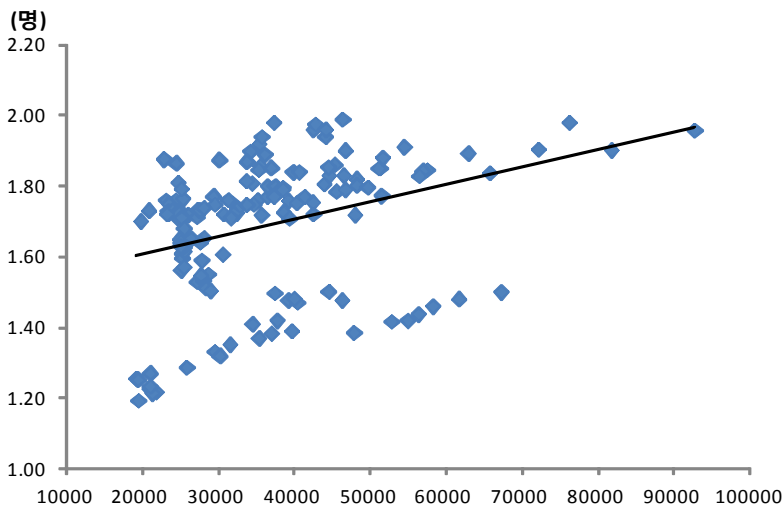
[그림 6-7] 여성(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



자료 : OECD Statistics

일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 간의 상관성은 다소 약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모형에 포함될 분석대상 국가들이 이미 2만불을 상회한 국가들로 한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동질성(homogene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였을 시 일인당 국민소득의 출산력에 대한 영향력은 단순 도식화 단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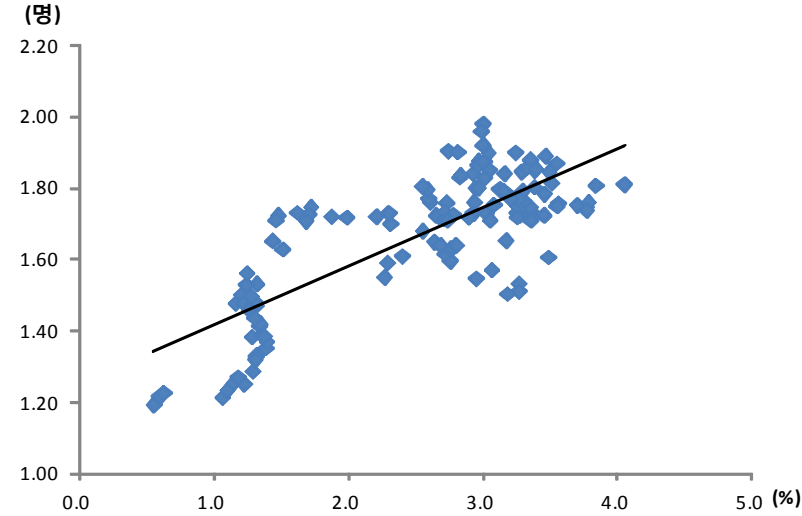
[그림 6-8] 일인당 국민소득과 합계출산율



자료 : World Bank

모형에 포함될 정책요인의 영향 정도를 총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즉, 모형 개발에 적용될 분석대상 국가들 사이에서 시계열적으로 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을 높였을 경우 소득 증가 효과 등이 나타나 출산율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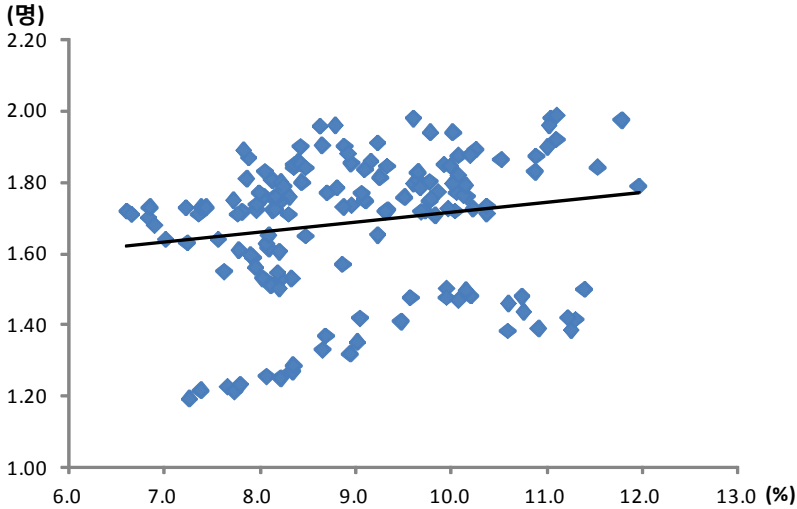
[그림 6-9] GDP 대비 가족정책지출 비율과 합계출산율



자료 : OECD Statistics

모형에 포함될 또 다른 정책요인으로서 GDP 대비 보건정책지출 비율은 가족정책 지출비율과 달리 합계출산율과의 상관성이 아주 약하게 나타난다. 즉, 과거부터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정책지출이라고 해도 가족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보건에 대한 정책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가 상이함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변량 모형에서 GDP대비 보건정책 지출비율은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경우 출산율과의 상관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림 6-10] GDP 대비 보건정책지출 비율과 합계출산율



자료 : OECD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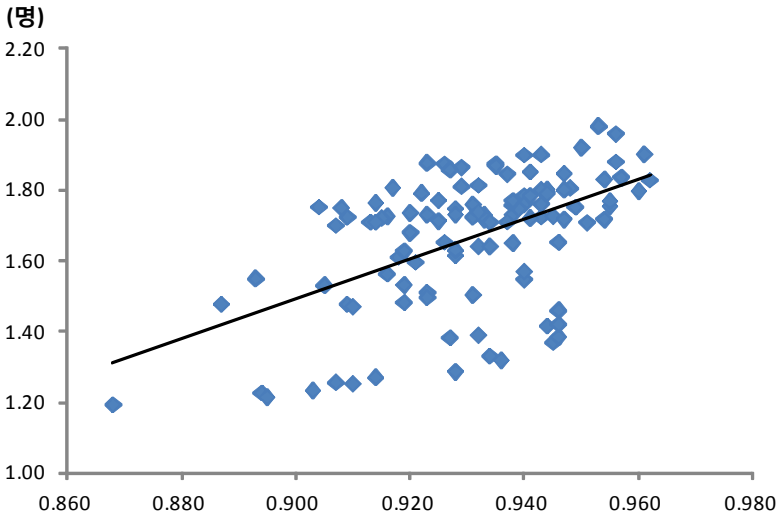
다. 사회문화적 요인

제5장에서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논의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요인은 직접적인 요인이자기보다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요인이면서 배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족가치관(자녀가치관), 양성평등(교육수준, 성역할, 가사노동분업)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은 국가마다 각자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으로서 국가를 패널그룹으로 적용하고 있는 본 모형에 필요한 각 요인에 대한 장기 시계열적 자료를 찾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가족가치관의 경우 국가마다 다른 기준에 의거하여 측정되고 있으며, 남성 가사활동 참여시간 역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모형에서는 양성평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서 UNDP의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를 사용하고자

한다. 남녀평등지수(GDI)는 국가별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남녀평등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남녀가 평등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성별 기대수명, 성인문맹률, 초·중·고등학교 취학률, 예상소득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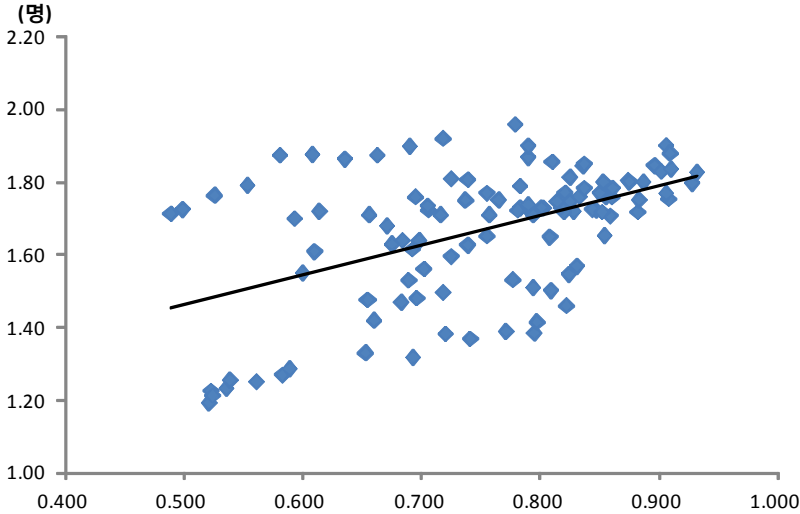
[그림 6-11] 남녀평등지수(GDI)와 합계출산율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UNDP에서는 남녀평등지수(GDI)와 함께 정치나 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를 발표하고 있다. 여성권한척도(GEM)의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여성의 참여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성권한척도 세부 지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입법·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전문직 및 기술직 여성비율, 남성 소득에 대한 여성의 추정 소득비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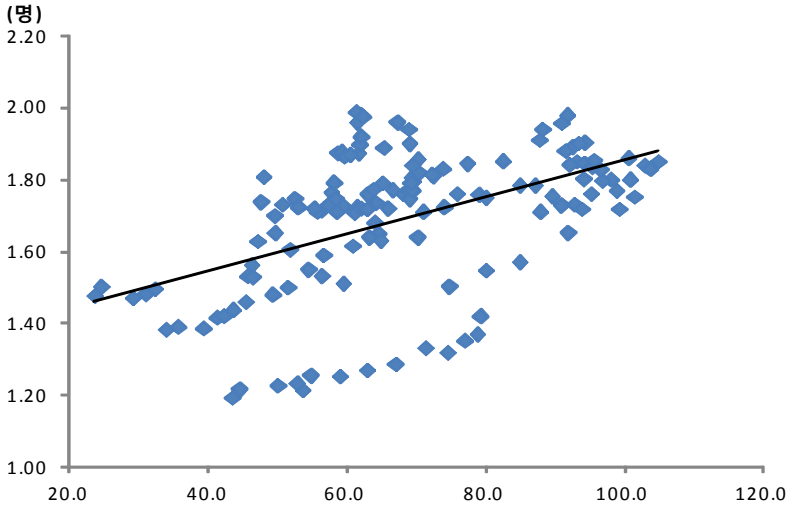
[그림 6-12] 여성권한척도(GEM)와 합계출산율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한편,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은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질 내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제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동시에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여성의 교육은 결혼과 출산의 행태에 영향을 미쳐 출산력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대비 여성의 대학진학 비율은 모형 개발에 추가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이 지표는 앞서의 남녀평등지수(GDI)가 초·중·고등학교 취학률만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6-13] 남성대비 여성의 대학진학비율과 합계출산율



자료 : World Bank

3. 출산력에 대한 요인별 영향 시차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의 출산력에 대한 영향을 보다 단기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인 일인당 국민소득은 $t-1$ 의 시차를 두고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GDP대비 보건정책 및 가족정책 지출비율은 정책 추진, 수혜자 발생, 출산 이행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여 $t-2$ 의 시차를 두고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양성평등 관련 지수(GDI, GEM)는 $t-1$ 의 시차를 적용한다. 한편, 남성대비 여성 대학진학비율은 대개 교육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혼인 및 출산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t-4$ 의 시차를 두고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인구학적 요인으로 조혼인율, 혼외출산비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은 당해연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차를 두지 않으며, 조혼인율의 경우 혼인 후 임신기간 등을 고려하여 $t-1$ 의 시차를 두고 출산력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하우스만 검정

앞서 제1절에서 패널분석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특정한 변수가 국가마다 잠재해 있고, 시계열별 독특한 특성이 매 기간에 잠재해 있음을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과 국가마다 시간마다 모두 고정되지 않고 확률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됨을 논의한 바 있다. 이들 모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따르기로 한다.

하우스만 검정통계량(H)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 = (\hat{\beta}_{FE} - \hat{\beta}_{RE})' [var(\hat{\beta}_{FE}) - var(\hat{\beta}_{RE})]^{-1} (\hat{\beta}_{FE} - \hat{\beta}_{RE})$$

두 모형 모두에 대해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1보다 작아 1%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5. 모형 설정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출산율 예측모형을 구성하는 인구학적,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은 <표 6-2>와 같다. 한편, 본 연구는 두 가지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선 모형1에서는 양성평등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남녀평등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 모두를 포함한다. 앞서 논의한 대로 두 지표는 구성요소 등을 고려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재언하면, 남녀평등지수(GDI)는 성별

기대수명, 성인문맹률, 초·중·고등학교 취학률, 예상소득 등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여성권한척도(GEM)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 입법·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전문직 및 기술직 여성비율, 남성 소득에 대한 여성의 추정 소득비율 등 세부지표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두 지표 간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양성평등 정도를 중복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모형에서는 상호통제를 통해 적어도 한 요인에 대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모형2에서는 남녀평등지수(GDI)만을 포함한다.

〈표 6-2〉 출산율 예측 모형에 포함되는 요인 기술

	변수	내용	시차
종속변수	합계출산율	명	t
인구학적 요인	조혼인율	천명당 혼인건수	t-1
	영아사망률	천명당 사망영아수	t
	초산연령	세	t
	혼외출산비율	%	t
경제적 (정책적) 요인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t-1
	1인당 국민소득	\$	t-1
	GDP대비 보건정책지출비율	%	t-2
	GDP대비 가족정책지출비율	%	t-2
사회문화 적 요인	GDI	점	t-1
	GEM	점	t-1
	남성대비 여성대학진학비율	율	t-4

이들 모형에 포함된 요인들에 대해 패널그룹(분석대상 국가)의 평균을 시계열에 따라 제시하면 <표 6-3>과 같다. 패널그룹 10개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전 기간 평균이 1.69이며, 1995년 1.61을 저점으로 2009년 1.8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혼인율은 패널그룹들의 전 기간 평균이 5.0이며,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패널그룹들의 초산연령 평균은 동 기간 29.1세에서 30.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 기간 평균은 29.8세이다. 패널그룹들의 영아사망률 평균은 동 기

간 5.1에서 3.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전 기간 평균은 4.3으로 나타난다. 혼외출산비율은 패널그룹들의 전 기간 평균이 36.1%로 높다. 이 비율은 1995년 29.9%에서 2009년 42.4%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6-3〉 출산율 예측모형에 포함된 요인의 패널그룹(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조 혼인율	초산 연령	영아 사망률	혼외 출산 비율	여성경 제활동 참가율	남성대비 여성대학 진학	일인당 국민 소득	양성 평등 지수	여성 권한 척도	GDP 보조정책 비율	GDP 가족정책 비율 ¹⁾
	명	%	세	10만명 당	%	%	%	만불			%	%
1995	1.64	5.1	29.1	5.1	29.9	50.7	50.2	2.9	0.91	0.66	8.18	2.55
1996	1.63	5.2	29.2	5.0	31.0	51.0	52.6	3.0	0.91	0.66	8.29	2.49
1997	1.62	5.1	29.4	4.9	31.6	51.4	55.7	2.8	0.91	0.67	8.25	2.43
1998	1.61	5.0	29.5	4.8	32.6	51.8	58.5	2.8	0.92	0.70	8.34	2.61
1999	1.63	5.1	29.5	4.6	33.6	52.8	62.4	2.9	0.92	0.70	8.51	2.57
2000	1.66	5.3	29.6	4.6	34.4	53.0	64.4	2.7	0.93	0.73	8.39	2.46
2001	1.64	4.8	29.7	4.5	35.2	53.2	66.8	2.7	0.93	0.73	8.70	2.50
2002	1.64	5.0	29.8	4.2	36.0	53.7	70.0	2.9	0.94	0.77	9.08	2.52
2003	1.68	4.9	29.9	4.1	36.8	53.8	73.4	3.6	0.94	0.79	9.51	2.60
2004	1.71	4.9	30.0	3.9	37.8	54.1	75.5	4.1	0.94	0.81	9.57	2.59
2005	1.71	5.0	30.1	3.8	38.7	54.3	76.7	4.3	0.95	0.81	9.58	2.55
2006	1.76	4.9	30.1	3.8	39.8	54.6	77.0	4.6	0.95	0.83	9.45	2.58
2007	1.77	5.0	30.2	3.7	40.8	55.0	77.0	5.1	0.95	0.85	9.39	2.57
2008	1.80	5.0	30.3	3.5	41.5	55.5	76.7	5.5	0.95	0.85	9.61	2.58
2009	1.81	4.8	30.4	3.5	42.4	55.2	77.4	4.9	0.95	0.85	10.56	2.57
전체	1.69	5.0	29.8	4.3	36.1	53.3	67.6	3.6	0.93	0.76	9.03	2.55
S.E.	0.19	0.76	0.68	0.89	14.90	8.00	18.73	1.32	0.02	0.11	1.22	0.87

주 : GDP대비 가족정책비율 산정 시, 조세혜택은 제외하였음.

자료 : OECD. <http://www.oecd.org/>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통계청, KOSIS.

패널그룹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50.7%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8년 55.5%까지 높아졌으나 2009년에는 다소 낮아졌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전 분석기간 평균은 53.3%이다. 패널그룹들의 남성 대비 여성의 대학진학 비율은 전 분석기간 평균 67.6%이며, 이는 1995년 50.2%에서 2009년 77.4%로 200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인다. 패널그룹들의 일인당 국민소득 평균은 다소의 불규칙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패널그룹들의 양성 평등지수는 1995년만 해도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소폭이나마 지속적인 상승세로 나타난다. 패널그룹들의 GDP대비 보건 정책지출비율 평균은 다소의 불규칙성이 존재하나 1995년 8.18%에서 2009년 10.56%로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패널그룹들의 가족정책 지출비율 평균은 분석대상 전 기간에 2.54%이며, 기간별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제3절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1. 모형 개발

모형1과 모형2의 패널분석 결과는 <표 6-4>에 제시하였다. 모형1과 모형2의 설명력은 73%와 7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1의 결과 조혼인율, 혼외출산비율, 일인당 국민소득, 여성권한척도(GEM), 남성대비 여성의 대학진학비율, 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이 출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초산연령은 부적 영향을 보인다. 모형2도 모형1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다만 초산연령의 효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영아사망률, 여성노동시장참여율, GDI, GDP대비 보건정책지출비율은 모형1과 모형2에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들 요인은 회귀계수 값이 아주 적어 모형에 포함하거나 제거하여도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증가나 감소에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 1

년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작은 변화라도 예측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형1과 모형2에는 이미 출산력 결정에 중요한 요인들로 규명된 이들 요인들을 그대로 포함하기로 한다. 다만, 작은 변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들을 제거한 단축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표 6-4〉 출산율 예측모형의 결과

	모형1		모형2	
	Coef.		Coef.	
조혼인율	0.092	***	0.096	***
영아사망률	-0.011		-0.015	
혼외출산율	0.006	***	0.009	***
초산연령	-0.060	*	-0.052	
여성노동시장참가율	-0.004		-0.005	
1인당 국민소득	0.019	***	0.018	***
GDI	0.177		0.440	
GEM	0.342	**		
남성 대비 여성 대학 진학률	0.002	**	0.002	***
GDP대비 보건정책 지출비율	-0.003		0.003	
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	0.100	***	0.100	***
상수항	2.18	**	1.859	**
R2	0.73		0.71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출산율 예측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text{모형1} : \text{TFR} = & 2.18 + 0.092 \times \text{조혼인율}_{(t-1)} - 0.011 \times \text{영아사망률} + \\
 & 0.006 \times \text{혼외출산율} - 0.060 \times \text{초산연령} - 0.004 \times \text{여성노동시} \\
 & \text{장참가율} + 0.019 \times \text{1인당 국민소득}_{(t-1)} + 0.177 \times \text{GDI}_{(t-1)} + \\
 & 0.342 \times \text{GEM}_{(t-1)} + 0.002 \times \text{남성대비 여성 대학 진학률}_{(t-4)} - \\
 & 0.003 \times \text{GDP대비 보건정책 지출비율}_{(t-2)} + 0.100 \times \text{GDP대비} \\
 & \text{가족정책 지출비율}_{(t-2)}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모형2 : } TFR = & 1.859 + 0.096 \times \text{조혼인율}_{(t-1)} - 0.015 \times \text{영아사망률} + \\
 & 0.009 \times \text{혼외출산율} - 0.052 \times \text{초산연령} - 0.005 \times \text{여성노동시장} \\
 & \text{참가율} + 0.018 \times 1 \text{인당 국민소득}_{(t-1)} + 0.440 \times GDI_{(t-1)} + \\
 & 0.002 \times \text{남성대비 여성 대학 진학률}_{(t-4)} - 0.003 \times \text{GDP대비 보건} \\
 & \text{정책 지출비율}_{(t-2)} + 0.100 \times \text{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_{(t-2)}
 \end{aligned}$$

2. 모형의 적합성 검증

이들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과거 연도에 대해 패널그룹(국가)의 요인들의 값을 적용하여 출산율을 추정하고, 그 결과가 실측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2009년도 실측치와 추정치의 차이는 모형1에서 0.05~0.07 수준 그리고 모형2에서 0.03~0.07 수준으로 미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국가의 경우에도 모형의 결과로서 예측치는 실측치를 0.1 범위 내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할 수 있다.

〈표 6-5〉 패널그룹의 출산율 예측모형 결과와 실제 출산율 간의 차이, 2009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모형1					
실측치	1.83	1.86	1.41	1.98	1.94
추정치	1.78	1.92	1.36	2.03	2.01
차이	0.05	-0.06	0.05	-0.05	-0.07
모형2					
실측치	1.83	1.86	1.41	1.98	1.94
추정치	1.77	1.93	1.36	2.01	1.99
차이	0.06	-0.07	0.05	-0.03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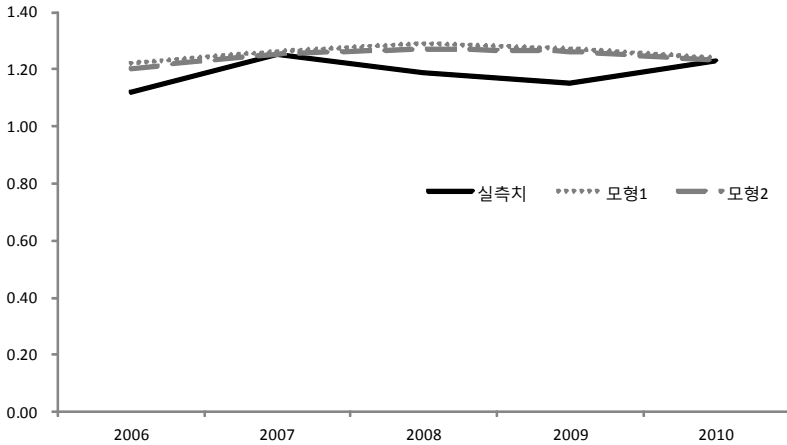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모형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출산율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성은 한국의 요인들에 대한 모형의 적용 결과로

서 출산율 예측치가 실제 출산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을 이용하여 2006~2010년 간 한국의 출산율을 예측한 결과는 2009년을 제외하면 실제 출산율과 0.1 범위 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의 경우에도 예측 출산율과 실제 출산율 간의 차이는 모형1에서 -0.12, 모형2에서 -0.11로 0.1을 다소 상회하나 비교적 정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래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 시 가정한 출산율과 실제 출산율 간의 간격이 많게는 0.2~0.3인 것에 비하며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이 상당히 정교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게다가 동 모형은 인구학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및 정책 요인이 변화하였을 경우 출산율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6〉 한국의 출산율 예측모형의 결과와 실제 출산율 간의 차이, 2006~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모형1					
실측치	1.12	1.25	1.19	1.15	1.23
추정치	1.22	1.26	1.28	1.27	1.24
차이	-0.10	-0.01	-0.09	-0.12	-0.01
모형2					
실측치	1.12	1.25	1.19	1.15	1.23
추정치	1.20	1.24	1.27	1.26	1.23
차이	-0.08	0.01	-0.08	-0.11	0.00

[그림 6-14] 한국의 출산율 예측모형결과와 실제출산율 간의 차이, 2005~2010



제4절 출산율 예측모형의 적용 사례

여기에서는 출산율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및 정책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중 일부의 변화를 가정할 경우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모형2를 적용하여 몇몇 중요한 요인들에 대한 가정의 경우 합계출산율을 예측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우선 국민소득의 증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불에 도달한다고 해도 다른 여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합계출산율은 1.29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6-7〉 출산율 예측모형 적용 결과 예시, 1인당 국민소득만 증가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TFR
3만불	1.26
4만불	1.27
5만불	1.29

그러나 정책을 강화하여 GDP대비 가족지출비율을 증가시킬 경우 출산율은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지출비율이 현 일본수준(1.3%)으로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1.31, OECD 국가의 평균수준(2.2%)로 증가할 경우 1.40, 그리고 프랑스 수준(3.7%)로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은 1.55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표 6-8〉 출산율 예측모형 적용 결과 예시, GDP대비 가족지출비율만 증가 시

GDP대비 가족지출비율(%)	TFR
1.0%	1.28
1.3%	1.31
2.2%	1.40
3.7%	1.55

주 : GDP대비 가족지출비율(%)은 현금, 서비스, 세제혜택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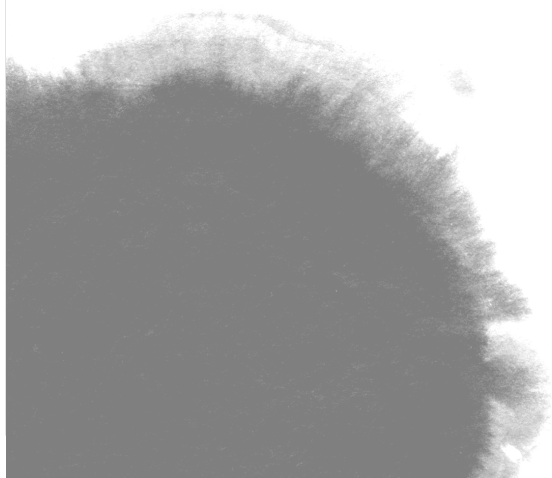
<표 6-9>는 경제적 및 정책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 중 일부의 변화를 가정할 경우,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 6-9〉 출산물 예측모형 적용 결과 예시, 사회경제변수 조합 시

GDI	혼외출산물	GDP 대비 가즉지출 비율				
		0,7%	1%	1,3%	2,2%	3,7%
0.926	2%	1.25	1.28	1.31	1.40	1.55
	10%	1.32	1.35	1.38	1.47	1.62
	20%	1.41	1.44	1.47	1.56	1.71
	30%	1.50	1.53	1.56	1.65	1.80
0.966	2%	1.26	1.30	1.33	1.42	1.57
	10%	1.33	1.37	1.40	1.49	1.64
	20%	1.42	1.46	1.49	1.58	1.73
	30%	1.51	1.55	1.58	1.67	1.82

07

결론



제7장 결론

인간 개인은 물론 총합적인 차원에서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력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변화는 개인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 임신능력(fecundability)이나 출산 의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쟁, 기근, 강제이주 등 아주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한 국가나 지역의 인구는 사망력이나 이동력보다는 출산력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인구 변동은 단순히 인구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는 출산율 변동 추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을 통해 인구를 조절(control)하기도 하였다.

출산력은 거시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과잉노동력 문제로 맬서스가 인구론을 주장한 이후 신맬서스주의자들은 피임법을 개발하고, 이를 여성해방론자들이 보급하면서 저출산현상은 유럽사회에서부터 보편화되었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 초 국제연합기구의 세계인구프로그램(world population programme)과 당시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단기간에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을 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1983년 이래 약 30년 동안 저출산현상을 겪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이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여 현재의 저출산 추이를 반등세로 전환하기 위

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저출산현상이 미래의 한국 사회에 가져오게 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주체와 일반국민은 출산율 변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의지나 일반국민의 관심과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사회 환경의 변화 및 정책에 따라 향후 출산율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지 매년 통계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전년도 출생통계에 대한 해석과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저출산정책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리고 어렵고, 이는 국민들 사이에 정책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동태적인 추계가 아닌 사회 환경과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출산율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출산력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 및 국내외 사례 고찰, 기존 자료의 심층분석 등을 통해 규명하였다. 그러한 요인들은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 중에는 적어도 서구 선진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요인들도 있다.

한편, 서구 선진국에서는 제2차 인구전환기가 오래 전부터 시작된 만큼 출산력이 1990년대 중반에 저점에 도달한 후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사회는 출산력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낮아졌을 뿐 다시 반등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의 기존 자료만을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할 때 다중공선성 등의 통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출산율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의 사회발전 정도(국민소득 2만불을 기준으로 설정)를 상회하는 국가들로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의 출산을 저하와 이후 반등을 경험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OECD 1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궁극적으로 모형 구축에 적용된 자료는 분석대상 국가를 패널그룹으로 하여 출산율이 저점에 도달하고 반등하였던 시기인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출산력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의 통계치이다. 즉 본 연구에서 출산율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를 합쳐 놓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는 패널분석모형(panel analysis)을 적용하였다. 패널분석방법은 종속변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독립변수로 포함되지 않은 요인 즉,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패널분석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특정한 변수가 국가마다 잠재해 있고, 시계열별 독특한 특성이 매 기간에 잠재해 있음을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과 국가마다 시간마다 모두 고정되지 않고 확률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는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이 모형에 포함된 변수 즉 요인들로는 중복효과 방지, 대표성 확보, 자료수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학적 요인으로 조혼인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 혼외출산비율, 경제적 요인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인당 국민소득,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남성대비 여성대학진학비율, 양성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 그리고 정책적 요인으로 GDP대비 보건정책 지출비율, GDP대비 가족정책 지출비율을 포함하였다. 물론, 혼외출산비율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도 분류할 수 있으며, 교육과 정

책은 인적자본이나 자녀양육의 경제적 비용 경감 등의 차원에서 경제적 요인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양성평등정도를 나타내는 두 지표의 배치에 따라 두 가지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모형1 남녀평등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 모두를 그리고 모형2는 남녀평등지수(GDI)만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출산율 예측모형은 패널그룹(분석대상국가)과 한국의 최근년도 출산율을 예측하여 실제 출산율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합성을 검토한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국가와 연도의 두 합계출산율 차이는 0.1 미만으로 동 모형은 비교적 정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어떠한 예측모형이라도 향후 출산율은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출산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형에 포함된 요인들 이외에도 다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이 밝혔던 요인들 이외의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확한 예측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실시하여 자료와 기법 상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과 공동으로 출산율 예측모형을 개발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19집, pp. 119-149.
- 김수정·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pp. 47-174.
- 김승권·박래영·안명옥·양정인·박정환(2005). 한국사회의 출산을 추락과 향후과제, **한국모자보건학회**
- 김우영(2007).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307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태현·이삼식·김동회(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 김태현·이삼식·김동회(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 인구센서스 자료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9(1).
- 김현숙·류덕현·민희철(2006).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을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남재량·이인재(2005). **한국의 출산을 하락추세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민희철·우석진·김현숙·김혜원·류덕현·옥우석(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 민희철(2008). 임금 및 소득이 출산 간격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 **재정학연구**, 1(1), pp. 41-61.

- 류기철·박영화(2009). 한국 여성의 출산을 변화와 출산간격 영향요인, **한국 인구학**, 32(1).
-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1(3).
- 박경숙·김영혜(2003).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 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 pp. 63-90.
- 박승희·김사현(2008). 여성노동자의 저출산 원인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설광언·최경수·윤희숙·유한옥·김태중·송준혁·조운영(2006).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03
- 은기수(2005).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고서
-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pp. 145-171.
- 이미경(1989). 국가의 출산정책: 가족계획 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6집, pp. 49-78, 한국여성연구소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운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희·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7).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및 출생통계시스템 개선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유계숙·박종서·이성용·조영태(2008). **최근의 출산을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을 예측**,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용(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회지**, 29(3), pp. 111-137.
-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장지연(2005).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제102호, 한국보

- 건사회연구원, pp. 45-46.
- 장혜경·홍승아·송치선(2005).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 특별위원회
- 전광희(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pp. 305-323,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체레미 리프킨 저, 이영호 옮김(1996). **노동의 종말**, 민음사
- 조병구·조운영·김정호(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보고서
- 조운영(2006).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생애주기 모형**,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6-01
- 조운영(2007). 효과적인 출산장려 가족정책의 모색: 출산과 노동공급 동시 장려방안을 중심으로, **KDI 정책포럼**, 174(2007-02), 한국개발연구원
- 차경욱(2005). 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pp. 137-148.
- 최경수(2004). **출산지원정책**, 최경수 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11
- 최경수 외(2004).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Ⅰ)**, 한국개발연구원
- 최경수(2008). **출산을 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8-14.
- 최숙희·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통계청(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2010). **출생통계 보도자료**
- 통계청(1996.12).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01.12).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2006.11). **장래인구추계결과**

한도숙(2000).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Adsera, A(2004). "Chang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 pp. 17-43.

Ahn, N., and P. Mira(2001). "Job Bust, Baby Bust: Evidence from Spanish Dat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4, pp. 505-522.

Ahn, N. and P. Mira(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 pp. 667-682.

Andersson, G.(2000). "The Impact of Labour-Force Participation on Childbearing Behaviour: Pro-Cyclical Fertility in Sweden during the 1980s and the 1990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6, pp. 293-333.

Andersson, G.(2005). "A Study on Policies and Practices in Selected Countries that Encourage Childbirth: The Case of Sweden", *MPIDR Working Paper WP 2005-005*.

Aries, P.(1964). *Centuries of Childhood*, Vintage Books.

_____(1980). Two Successive Motivations for the Declining Birth Rate in the Wes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6(4) pp. 645-650.

Arroyo, C. R., and J. Zhang.(1997). "Dynamic Microeconomic Models of Fertility Choice: A Surve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0, pp. 23-5 .

Atoh, M., and M. Akachi.(2003). "Low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Japan",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pplement to Volume 1*.

- Averett, S. L. and L. A. Whittington(2001). "Does Maternity Leave Induce Births?". *Southern Economic Journal*, 68(2), pp. 403-417.
- Beck, U., A. Giddens and S. Lash(1994).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y*.
- Barmby, T., and A. Cigno(1990). "A Sequential Probability Model of Fertility Patter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3, pp. 31-51.
- Becker, G. 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ecker, G. S(1960). "An Econometric Analysis of Fertility". in A. J. Coale, ed.,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s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cker, G. S., K. M. Murphy, and R. F. Tamura(1990). "Human Capital, Fertilit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 Billari, F. C. and H. P. Kohler(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pp. 161-176.
- Billari, F. C., M. Castiglioni, T. C. Martin., F. Michielin, and F. Ongaro(2002). "Household and Union Formation in a Meditterance fashion: Italy and Spain" in E. Klijzing and M. Corjin (eds.). *Fertility and Partnership in Europe: Findings and Lessons from Comparative Research*, 2, Genova and New York: United Nations.
- Billingsley, S.(2010). "The Post-Communist Fertilit Puzzle", *Population Research Policy Review*.
- Brewster, K. L., and R. R. Rindfus(2000). "Fertility and Women's

-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Sociology*, 26, pp. 271-96.
- Buttner, T., and W. Lutz(1990). "Estimating Fertility Responses to Policy Measures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3), pp. 539-555.
- Caldwell, J. C. and T. Schindlmayr(2003). "Explanations of the Fertility Crisis in Modern Societies: A Search for Commonalities," *Population Studies*, 57(3), pp. 241-263.
- Castles, F. G(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pp. 209-227.
- Caucutt, E. M., N. Guner, and J. Knowles(2002). "Why Do Women Wait? Matching, Wage Inequality, and the Incentives for Fertility Delay". *Review of Economic Dynamics* 5, pp. 815 - 855.
- Chesnais, J(2000). "Determinants of Below-Replacement Fertility",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40/41, pp. 126-136,
- _____(2005). "Population History and Policy in France", *paper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Seoul.
- Cigno, A.(1992). "Children and Pens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5, pp. 175-183.
- D'Addio, A. C., and M. M. d'Ercole(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 Del Boca, D(2002). "The Effect of Child Care and Part Time Opportunities on Participation and Fertility Decisions in Italy".

-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 pp. 549 - 73,
- Del Boca, D(2002). "Low Fertility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Italian Women: Evidence and Interpretation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61.
- Diprete, T. A., S. P. Morgan., H. Engelhardt., and H. Pacalovaa(2003). "Do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the Costs of Children Generate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Fertility Rat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 pp. 439 - 77.
- Doepke, M.(2004). "Accounting for Fertility Decline during the Transition to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9(3).
- Duvander, A. Z., and G. Andersson(2005).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in Sweden: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Father's Uptake of Parental Leave on Continued Childbearing", *MPIDR Working Paper WP 2005-013*.
- Easterlin, R. A(1987). *Birth and Fortune*,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Eberstadt, N(1994). "Demographic Shocks After Communism: Eastern Germany, 1989-93",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1), pp. 137-152.
- Engelhardt, H., T. Kögel, and A. Prskawetz(2004).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econsidered: A Ma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1960-2000", *Population Studies*, 58(1), pp. 109-120.
- Ermisch, J. F(1980). "Time Costs, Aspirations and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n German Fertilit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ume 42, Issue 2, pp. 125 - 143,
- Fokkema, T., H. de Valk, J. de Beer., and C. van Dubin(2008). "The Netherlands: Childbearing within the context of a "Poldermodel"

- society", *Demographic Research*, 19(21).
- Fukuda. S(2010). "Examination of future cohort fertility in Japan",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2010. Vienna, Austria, 1-4 September.
- Galor, O., and D. N. Weil(1996). "The Gender Gap, Ferti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6(3), pp. 374-387.
- Grant, J., S. Hoorens, S. Sivadasan, M. van het Loo, J. DaVanzo, L. Hale, S. Gibson, and W. Butz(2004).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RAND Europe.
- Gustafsson, S. S., E. Kenjoh, and C. M. Wetzels(2002). "Postponement of Maternity and the Duration of Time Spent at Home after First Birth: Panel Data Analyses Comparing Germany, Great Britain, the Netherlands and Sweden",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59.
- Gauthier, H., and J. Hatzius(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pp. 295-306.
- Hara, T(2003). "Fertility Trend and Family Policies in Germany, Austria, Switzerland, and the Netherlands",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Population)*, Supplement to Volume 1.
- Happel, S. K., J. K. Hill, and S. A. Low(1984). "An Economic Analysis of the Timing of Childbirth", *Population Studies*, 38(2), pp. 299-311.
- Hoem, J. M(1990). "Social Policy and Recent Fertility Change in Swede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4), pp. 735-748.
- _____ (1993). "Public Policy as the Fuel of Fertility: Effects of

- a Policy Reform on the Pace of Childbearing in Sweden in the 1980s", *Acta Sociologica*, 36, pp. 19-31.
- Hoem, B., and J. M. Hoem(1996). "Sweden's Family Policies and Roller-Coaster Fertility",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3(3), Tokyo: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 Hyatt, D. E., and W. J. Milne(1991). "Can Public Policy Affect Fertility?", *Canadian Public Policy*, 17(1), pp. 77-85.
- ILO(2004). *"Economic Security for a Better World"*.
- Inglehart, R., and C. Welzel(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to, H(2000). "Econometric Anlysis on Childbirth, Marriage and Labour Market" (in Japanese), *Population Study*,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okyo.
- Kogel, T(2004). "Did the Associ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within OECD Countries Really Change its Sig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 pp. 45 -65.
- Kohler, H. P., F. C. Billari., J. A. Ortega(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pp. 641-680.
- Lalive, R., and J. Zweimüller(2005). "Does Parental Leave Affect Fertility and Return-to-Work? Evidence from a "True Natural Experiment", *Working Paper No. 242*, Institute for Empirical Research in Economics University of Zurich.
- Lesthaeghe, R(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pp. 211-251.
- Macunovich, D. J(1996). "Relative Income and Price of Time:

- Exploring Their Effects on US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Supplement: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New Patterns, New Theories, pp. 223-257.
- McDonald, P(1990). "Sustaining Fertility through Public Policy: The Range of Options", *Population*, 57, pp. 417-446.
- _____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pp. 485-510.
- _____ (2007). "Low Fertility and Policy", *Ageing Horizons*, Issue No. 7, pp. 22 -27.
- McNown, R., and C. R. Cano(2005). "A Time Series Model of Fertility and Female Labour Supply in the UK", *Applied Economics*, Volume 37, Issue 5.
- Moffit, R(1984). "Profiles of Fertility, Labour Supply and Wages of Married Women: A Complete Life-Cycle Model",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2), pp. 263-278.
- _____ (1984). "Optimal Life-cycle Profiles of Fertility and Labor Supply", *Research in Population Economics* 5, pp.29~50.
- Neels, K(2010). "*Temporal variation in unemployment rat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tempo and quantum of fertility: Some evidence for Belgium, France and the Netherland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Dallas, 17 April.
- Newman, J. L., and K. I. Wolpin(1984). "A Hazard Rate Approach to the Timing of Births", *Econometrica*, 52(4), pp. 939-961.
- Ogawa, N(2003). "Japan's Changing Fertility Mechanisms and its Policy Responses",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0(1).
- Philipov, D. and H. P. Kohler(July, 1999). "Tempo effects in the

- fertility decline in eastern Europe: evidence from Bulgaria, the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and Russia". Rostock: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1999-009*.
- Ravi, B. P., S. L., Verma(1996). *Fertility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1993-2016*".
- Retherford, R. D., and N. Ogawa(2005). "Japan's Baby Bust: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20(118).
- Rønsen, M(2004).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Norway - A Reflection on Trends and Possible Connections".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Demographic Research, Vol. 10, Article 10*, pp. 265-286.
- Rosenzweig, M. R. and C. E. McCulloch(1980). "Life-Cycle Labor Supply and Fertility: Causal Inferences from Household Model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2), pp. 328-348.
- Rosenzweig, M. R(1999). "Welfare, Marital Prospects, and Nonmarital Childbear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7, No. S6, pp. S3-S32.
- Santow, G., and M. Bracher(2001). "Deferment of first birth and fluctuating fertility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17.
- Schultz, T. P(1994). "Marital Status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Welfare and Labor Market Effec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2), *Special Issue: Women's Work, Wages, and Well-Being*, pp. 637-669.
- Sobotka, T(2004). "Is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Explained by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Population and*

- Development Review*, 30(2), pp. 195-220.
- Sobotka, T., V. Skirbekk and D. Philipov(June, 2011). "Economic Recession and Fertility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9(2).
- Sleebos, J. E(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5*.
- Shryock. H. S., and J. S. Siegel(1976).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condensed edition. Stockwell EG, editor*", New York: Academic Press.
- Straughan, P., A. Chan and G. Jones(2008).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Routledge.
- Sundstroöm, M., and F. P. Stafford(1992).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Fertility and Public Policy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8, pp. 199-215.
- Tanturri, M. L., and L. Mencarini(2008). "Childless or Childfree? Paths to Voluntary Childlessness in Ita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4(1), pp. 51-77.
- Tasiran, A. C(1995). "Fertility Dynamics: Wage and Income Effects on the Timing and Spacing of Births in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Contribution to Economic Analysis No. 229*, Amsterdam: North-Holland.
- United Nations(1956). "*Future Population Estimates by Sex and Age. Report II. The Population of South America, 1950-1980*". United Nations, New York.
- Van de Kaa, D. J(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pp. 1-59.
- Van G., P.A. Noud and J. D. Beer(1997). "Birth trends and consumer

confidence: An econometric analysis" (In Dutch),
Maandstatistiek van de Bevolking.

Verma, R. B. P., S. Loh, S. Y. Dai., and D. Ford(1996). "Fertility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1993-2016".
Catalogue no. 91F0015MPE. Ottawa: Statistics Canada.

Walker, J. R(1995). "The Effect of Public Policies on Recent Swedish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8, pp. 223-251.

Willis, R. J(1973).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pp. S14-S64.

Witte, J. C. and Gert G. Wagner(1995). "Declining Fertility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A Demographic Response to Socioeconomic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2), pp. 387-397.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출 및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6,000원
	11-04	약제비 자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미아	5,000원
	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야채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7,000원
	11-06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7,000원
	11-07	저소득층 이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6,000원
	11-09	인구집단 의료이용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해	김동진	6,000원
	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재고방안	신영석	7,000원
	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11-13	사회보장제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5,000원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미정
	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6,000원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태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6,000원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11-17-4	2011 보건복지 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미정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6,000원
	11-21	달수급 제고를 위한 기초보장 패널구축: 역동성 평가를 위한 양적·질적 패널 구축 및 기초연구	최현수	미정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7,000원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8,000원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 국제비교연구: 정부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복지서비스행정을 중심으로	강해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미정

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미정
11-28	지역별 건강성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5,000원
11-29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7,000원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6,000원
11-31	사회복지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미정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5,000원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6,000원
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미정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미정
11-37-1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미정
		(외부)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7,000원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미정
		(외부)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미정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미정
		(외부)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정희	미정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미정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미정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6,000원
11-37-14	고령친화여가 산업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8,000원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5,000원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정희	미정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이소정	미정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10,000원
비발간	국제신포자음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미정
		(외부)	
11-37-21	북한연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미정
		(외부)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8,000원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11,000원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10,000원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10,000원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9,000원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8,000원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5,000원
	11-42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11,000원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아동분야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김미숙	13,000원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미정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옥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바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7,000원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6,000원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화개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바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박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세대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율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가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임업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장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산노년층의 특성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산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신우덕	5,000원
10-30-21	산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자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삼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Ⅰ)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